2021 미래에셋 연금서베이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측정 및 분석

MIRAE ASSET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1 미래에셋 연금서베이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측정 및 분석

심현정 · 정나라

MIRAE ASSET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발행일 2021.4.22
발행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편집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제작·디자인 미래에셋생명 TDC
인쇄 미래에셋생명 TDC

본 자료의 저작권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용·발췌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요약 4

Ⅰ. 서론 6

Ⅱ. 연금이해력 8

1. 개념과 구성 8

2. 특징 9

Ⅲ. 부문별 연금이해력 14

1. 퇴직연금 14

1) 특징 14

2) 문항별 분석 17

2. 연금저축 29

1) 특징 29

2) 문항별 분석 32

3. IRP 47

1) 특징 47

2) 문항별 분석 49

4. 공적연금 등 기타 62

1) 특징 62

2) 문항별 분석 64

Ⅳ. 결론 및 시사점 78

부록 84

<요약>

우리나라 공·사적연금의 양적 규모는 빠르게 성장 중이다. 하지만 연금가입자의 질적 성장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해 금융이해력이 필요하듯 연금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노후를 대비하려면 연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즉 '연금이해력'이 갖춰져야 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우리나라 연금가입자의 연금이해력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 문항을 개발, 전국의 3050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분석하였다.

3050 직장인의 연금이해력 분석 결과는 연금이해력 총점 분석과 4가지 부문의 연금이해력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연금이해력 총점에서는 연금이해력의 개념과 측정 문항을 개괄하고, 연금이해력 총점(총 400점) 산출 결과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4가지 부문별 연금이해력을 각각 살펴봤다. '1) 퇴직연금 2) 연금저축 3) IRP 4) 공적연금 등 기타'의 부문별 이해력 점수(각 100점) 분포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고, 각 측정 문항의 정답률과 응답 특징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조사분석 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연금자산 관리를 위한 연금이해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금이해력 총점]

- 우리나라 직장인의 연금이해력 점수는 400점 만점에 190.5점(100점 만점 환산시 47.6점)이다.
- 50대 연금이해력이 비교적 높고, 남녀간 점수차는 적은 편이다.
- 사적연금에 많이 가입한 사람들의 연금이해력이 높았다.
- 연금저축 부문 점수가 가장 높고, IRP 부문이 가장 낮았다.
- 공적연금 관련 이해력은 50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문별 연금이해력]

1)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이해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51.7점이다.
- 제도별 퇴직연금 이해력 점수는 'DC형(57.4점) 〉 DB형(56.3점) 〉 퇴직연금

미가입자(46.7점)' 순이었다.

-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이해력은 높은데 비해, 자산 운용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절반 이상(56.2%)이 회사 도산·폐업시 퇴직금 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2) 연금저축

- 연금저축 이해력 점수(55.1점)는 연금이해력의 4개 부문 중에서 가장 높았다.
- 연금저축펀드 가입자의 연금저축 이해력이 신탁·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자보다 높았다.
-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지만 구체적 활용방법은 잘 알지 못했다.
-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으나, 과세이연이나 운용에 대한 이해도는 낮았다.

3) IRP

- IRP 이해력 점수는 평균 39.2점으로 연금이해력의 4개 부문 중에서 가장 낮았다.
- IRP 가입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정답률이 낮았고, 자산운용과 관련된 문항의 정답률이 특히 저조했다.
- 연금저축과 연계해 IRP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다.

4) 공적연금 등 기타

- '공적연금 등 기타' 부문의 연금이해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44.5점이다.
- 50대, 두 종류 이상의 사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들의 이해력 점수가 높았다.
- 연금 수령에 관한 문항의 정답률이 특히 저조했다.

[시사점]

- '세제혜택'이라는 좁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노후자산관리' 프레임으로 연금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
- 연금 '운용'에 관련된 지식을 대폭 향상해야 한다.
- 다양한 연금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 연금 인출단계 지식을 강화해야 한다.
- 행동경제학적 요소를 가미한 제도적 넛지의 도입과 활용이 필요하다.

01 서론

우리나라 연금 시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32년 만에 834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사적연금도 마찬가지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15년만에 적립금 규모가 256조원으로 늘었고,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적립금은 각각 152조원, 213조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아우르면 1454조원에 달한다. 고령화의 심화 속에 연금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연금자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연금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노후생활에서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지만, 연금가입자들이 연금에 대해 잘 알고 별다른 어려움없이 연금을 운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연금을 단기예금으로 운용한다든지, 노후에 연금으로 찾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가 연금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관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연금의 양적 성장과 함께 연금이해력을 높이는 질적 깊이가 더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금이해력의 올바른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해외에서 'Pension Literacy' 라는 용어를 사용해 연금지식 수준 격차를

설명[1] 하거나, 연금이해력과 은퇴준비의 관계를 규명[2] 하는 몇몇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연금이해력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교한 측정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연금이해력' 개념을 규정하고, 측정 문항을 개발해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금이해력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금이해력의 개념은 '금융이해력' 개념을 일부 차용했으며, 40개의 측정 문항은 우리나라 연금 제도 및 상품을 포괄하고 연금 가입과 운용, 인출 전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보고서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연금이해력 점수를 산출하여,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공적연금 등 기타 각 부문의 연금이해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였다. 다음으로 각 문항의 정답률 및 응답 특징을 분석해 연금이해력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연금자산 운용을 위한 연금이해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1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조사>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30~59세 직장인 1,000명 - 서울,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거주자 - 10인 이상 근무 직장 근로자 (공무원 제외) -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개념에 대한 기초적 인지가 있는 자
조사 기간	2021년 2월 1일 ~ 8일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웹/모바일 조사 - 100명 대상 예비조사를 통한 연금이해력 문항 난이도 조정 - 수정한 설문지로 1,000명 본조사 시행
조사 내용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공적연금 등 기타 4개 부문의 제도, 세제, 상품 관련 기초 지식

1 Holman, D., & Hess, M. (2017). Pension literacy and social inequality in the United Kingdom. Innovation in Aging.
2 Adeabah, D. (2020). Pension literacy and retirement planning in an emerging economy.

02 연금이해력

1. 개념과 구성

연금이해력(Pension Literacy)은 연금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를 의미한다. 이는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금융이해력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금융 관련 개념에 대한 지식, 효과적인 재무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수학적 기술이나 산술능력'을 뜻한다(Hastings 외, 2012). OECD 산하 경제 및 금융 교육에 관한 글로벌협력기구(INFE)는 금융이해력의 측정과 그에 근거한 교육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표준화된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2년에 한번씩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금이해력'은 노후소득 창출에 주된 목적이 있는 '연금'에 초점을 맞춰 금융이해력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연금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과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물론이고 연금보험, 주택연금 등 연금으로 통칭되는 금융상품까지 그 범위가 방대하다. 이해력 측정 항목은 각 연금의 세세한 규정보다는 연금에 대한 개념적 틀과 기초 활용 지식에 중점을 뒀다.

<연금이해력 측정 문항 구성>

연금이해력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공적연금 등 기타' 네 부문으로 구성된다. 각 부문은 10문항, 100점 만점으로 연금이해력 총점은 400점이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부문은 제도, 운용/상품, 세제로 구분해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고, 공적연금 등 기타 부문은 하위 5개 연금별 기초 지식 문항을 포함했다.

퇴직연금 부문은 제도 지식을 중심으로 측정항목을 구성했다. 근로자가 속한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 여부와 관심도가 다를 수 있어 운용/상품 분야 질문을 제외하고 제도 영역 질문을 늘렸다.

연금저축 부문은 제도, 운용/상품, 세금 분야 질문을 고루 포함하였고, 운용/상품 분야에서 연금저축 상품(연금저축펀드, 보험, 신탁)의 특성과 구분을 다뤘다.

IRP 부문 역시 각 분야 질문을 고루 포함하였다. IRP는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이 연금저축과 합산되므로 연금저축과의 연계성을 반영한 질문을 삽입하였다.

공적연금 등 기타 부문에는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금보험, 주택연금에 대한 질문을 고루 포함했다.

	제도	운용/상품	세금	합계
퇴직연금	8	-	2	10
연금저축	5	2	3	10
IRP	5	2	3	10

공적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금보험	주택연금	합계
	2	3	1	2	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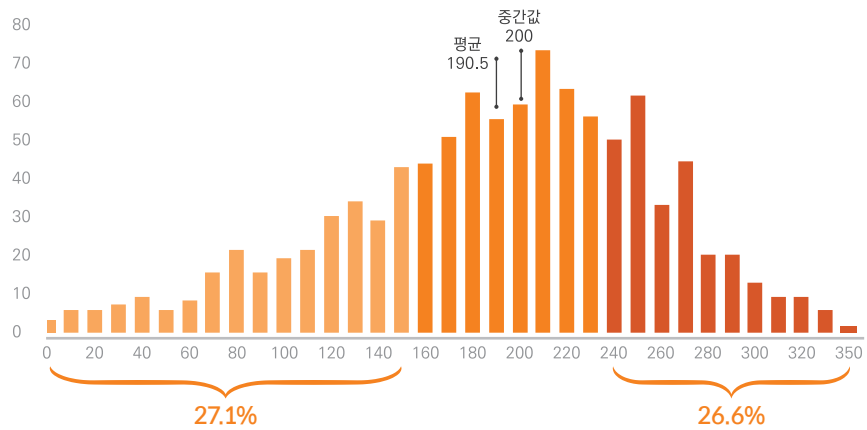
2. 특징

- 우리나라 직장인의 연금이해력 점수는 400점 만점에 190.5점(100점 만점 환산시 47.6점)이다.
- 50대의 연금이해력 점수가 높고, 남녀간 유의한 점수차는 없었다.
- 두 종류 이상의 사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연금이해력이 높았다.
- 연금저축부문 점수가 가장 높고, IRP부문이 가장 낮았다.
- 50대는 '공적연금 등 기타' 부문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성별, 연령별, 부문별 연금이해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연금이해력 점수는 400점 만점에 평균 190.5점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7.6점이며, 응답자들이 40개 측정 문항 중 평균 19개를 맞힌 셈이다. 최고점은 350점이며, 중간값은 200점이었다. 점수 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점수가 낮은 쪽으로 완만하며, 점수가 높은 오른쪽 편이 가파른 'left-skewed' 형태를 띤다. 점수가 낮은 쪽이 높은 쪽보다 상대적으로 더 넓게 분산되어 있다. 240점(100점 환산시 60점[3])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비중은 26.6%, 160점 미만(100점 환산시 40점)의 비중은 27.1%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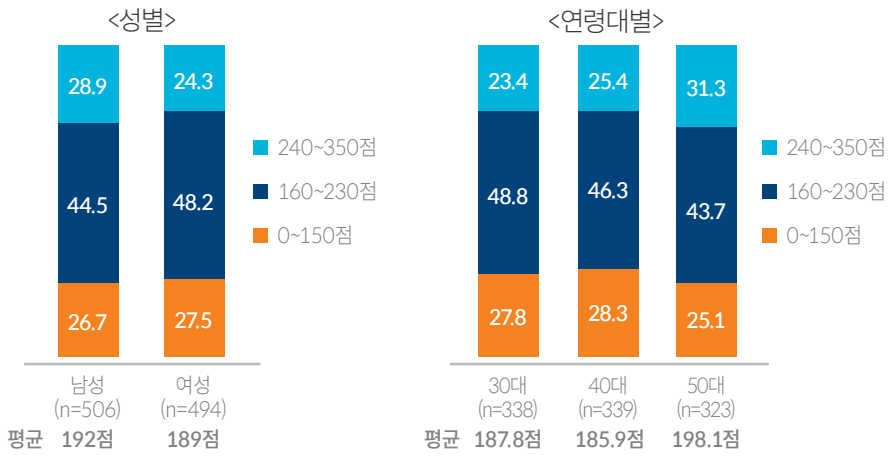
<도표 II-1> 연금이해력 총점 분포



둘째, 50대의 연금이해력 점수가 높고, 남녀간 유의한 점수차는 없었다. 남성과 여성의 연금이해력 총점은 각각 192점, 189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187.8점)와 40대(185.9점)의 점수는 비슷했지만, 50대의 점수가 198.1점으로 10점 이상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였다. 5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240점 이상 고득점 비중이 높은 것이 평균 점수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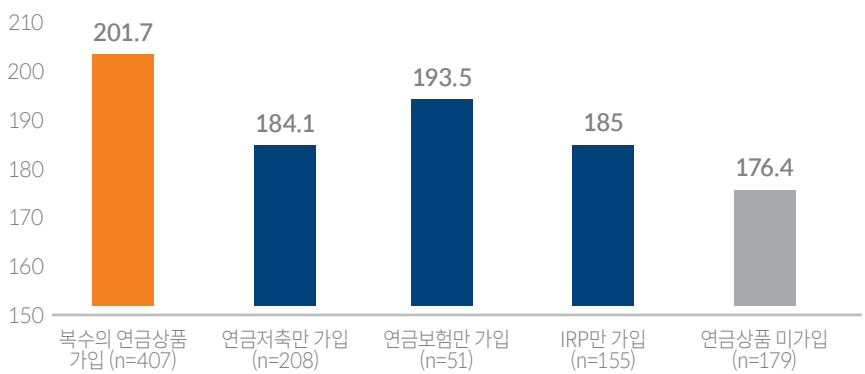
3 각 이해력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고득점, 40점 미만을 저득점으로 일괄적으로 구분하였다.

<도표 II-2> 성별·연령별 연금이해력 총점 분포(%)



셋째, 두 종류 이상의 사적연금[4]에 가입한 사람들의 연금이해력이 높았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IRP 중 두 종류 이상 연금에 가입한 이들이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이들의 연금이해력 총점이 201.7점(전체 평균 190.5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어떤 연금상품에도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 179명은 평균 176.4점을 받아 점수가 가장 낮았다. 한 종류의 연금만 가입한 사람들은 중간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금보험만 가입한 이들(51명)의 점수는 평균 193.5점, IRP만 가입한 사람들(155명)은 185점, 연금저축만 가입한 사람들(208명)은 184.1점이었다. 여러 종류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이해력이 높은 것은 이들이 다수의 연금을 비교, 선택하여 가입해 운용한 경험 속에 정보와 지식이 쌓였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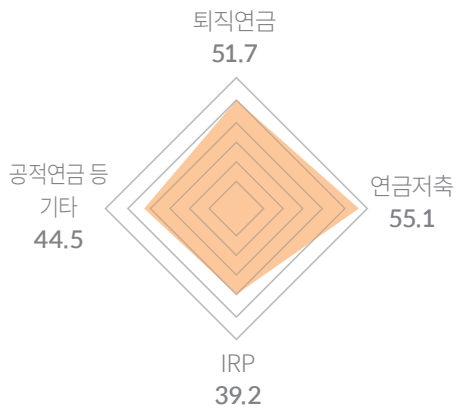
<도표 II-3> 연금상품 가입유형별 연금이해력 총점



4 본래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이 아닌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칭한다. 다만 본 분석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응답자 대부분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어,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 (변액)연금보험, IRP' 세 가지를 사적연금으로 보고 각 상품의 가입여부에 따른 분석을 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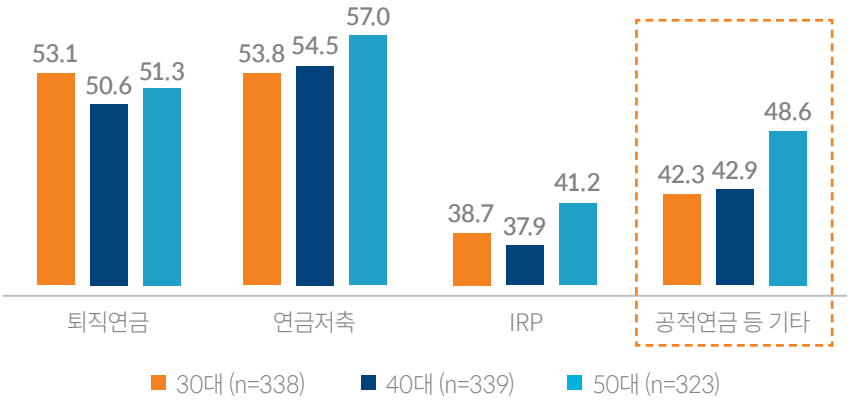
넷째, 연금저축 부문 점수가 가장 높고, IRP 부문이 가장 낮았다. 각 부문별 연금이해력 점수는 연금저축 (55.1점) 〉 퇴직연금(51.7점) 〉 공적연금 등 기타(44.5점) 〉 IRP (39.2점) 순이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비해 IRP 점수가 낮은 것은 IRP가 가입대상 확대를 기점으로 활성화된 것이 오래되지 않은 점, 연금저축과 연계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적연금 등 기타 부문은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고령시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연금에 대해 다루고 있어 은퇴까지 시일이 많이 남은 3050 직장인의 관심 및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표 II-4> 연금이해력 부문별 평균 점수



다섯째, 50대는 '공적연금 등 기타' 부문의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개 부문 연금이해력의 연령대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부문에서 3~40대와 50대의 점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공적연금 등 기타' 부문에서는 50대의 연금이해력 점수(48.6점)가 3~40대(42.3~42.9점) 보다 5.7~6.3점 높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0대는 연금수령 시기가 가까운 만큼 국민연금을 포함해 은퇴소득원이 되는 다양한 연금 제도 및 상품에 두루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표 II-5> 연령대별 각 부문 연금이해력 평균 점수



03 부문별 연금이해력

1. 퇴직연금

1) 특징

- 퇴직연금 이해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51.7점이다.
- 제도별 퇴직연금 이해력 점수는 'DC형(57.4점) > DB형(56.3점) > 퇴직연금 미가입자(46.7점)' 순이었다.
-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이해력은 높은데 비해, 자산 운용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절반 이상(56.2%)이 회사 도산·폐업시 퇴직금 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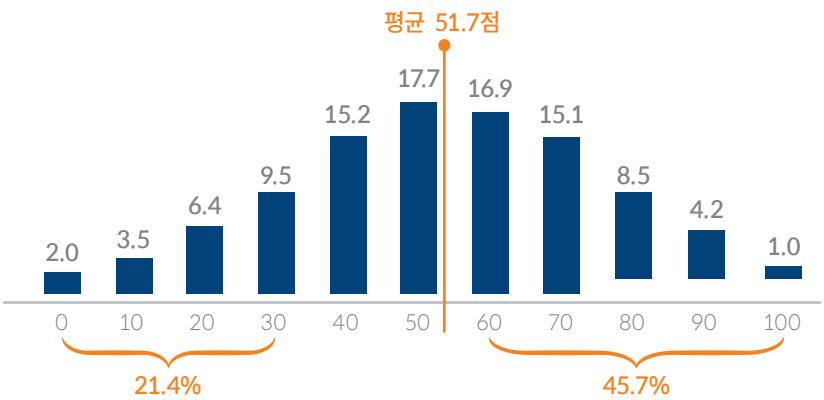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눌 수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 (이하 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으로 구분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 중 27.5%가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중 DB형이 24.9%, DC형이 61.6%, IRP특례 및 병행 사업장이 13.5%이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과연 퇴직금·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잘 활용하고 있을까? 전국의 3050 직장인 1,000명에게 퇴직급여의 제도, 세제, 운용에 관한 핵심내용 10가지에 대해 물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퇴직연금 이해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51.7점이다. 대략 절반 정도인 40~50점 사이에 34.6%가 집중되어 있다. 응답자 1,000명 중 457명(45.7%)은 60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거두었고, 반대로 214명(21.4%)은 40점 미만으로 점수가 비교적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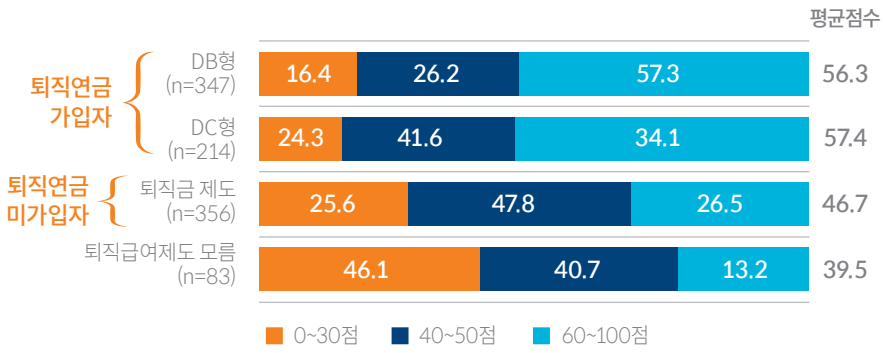
<도표 III-1> 퇴직연금 이해력 점수 분포 (%)



둘째, 퇴직연금 이해력 점수는 'DC형 가입자(57.4점) 〉 DB형 가입자(56.3점) 〉 퇴직연금 미가입자(46.7점)' 순이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해력이 미가입자[5]보다 높았다. 60점 이상 고득점자 비율이 DB, DC는 높았지만 퇴직금 제도는 낮았다. 한편 본인의 퇴직급여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83명 정도로 많지는 않았지만, 평균점수가 39.5점으로 낮았다.

5 '퇴직연금 가입자'라는 말이 흔히 쓰이는 데 비해, 퇴직금 제도 하의 근로자를 일컫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편의상 이들을 '퇴직연금 미가입자'로 칭하였다. 한편, 본인이 속한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83명 중에는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도표 III-2> 퇴직급여제도별 퇴직연금 이해력 점수 분포 (%)



셋째,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이해력은 높은데 비해, 운용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내용인 퇴직급여 산출기준을 묻는 문항(Q1,Q2)의 정답률은 78.6%, 77.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다. 특히 DC형은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투자규정이나 투자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 위험자산 투자한도(70%)를 알고 있는 비율은 17.3%에 그쳤고, DC형 퇴직연금에서 ETF에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28.1%에 그쳤다.

넷째,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절반 이상(56.2%)이 회사 도산·폐업시 퇴직금 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사내에 적립한다. 따라서 기업의 재정상황 악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퇴직금 미지급 위험이 있다. 그런데도 퇴직연금 미가입자 중 56.2%가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도표 III-3> 퇴직연금 이해력 문항별 정답률

이해도	구분	질문	정답률
상	제도	퇴직급여액 산출기준(DC형)	78.6%
상	제도	퇴직급여액 산출기준(퇴직금, DB형)	77.2%
상	제도	DB형과 DC형의 유불리 기준	65.6%

상	세금	퇴직급여를 IRP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여부	64.8%
중	제도	퇴직금 및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56.8%
중	제도	DB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액 결정 요인	46.6%
중	제도	퇴직금 제도 도입 회사가 도산·폐업할 경우 퇴직금 미지급 가능성	43.2%
하	세금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 시기	38.8%
하	제도	DC형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	28.1%
하	제도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적립금을 위험자산(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	17.3%

* 이해도 상: 정답률 60% 이상, 중: 40~60%, 하: 40% 미만

2) 문항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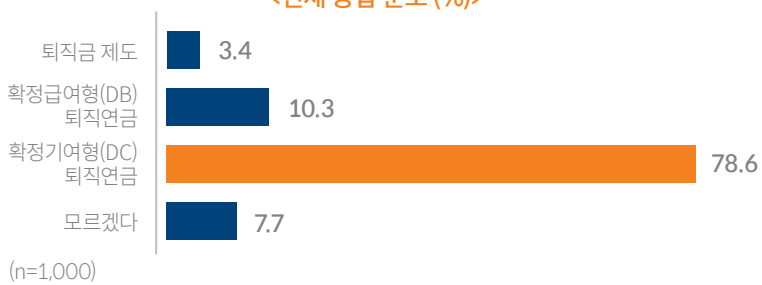
【DC형 퇴직급여 산출기준 (정답률 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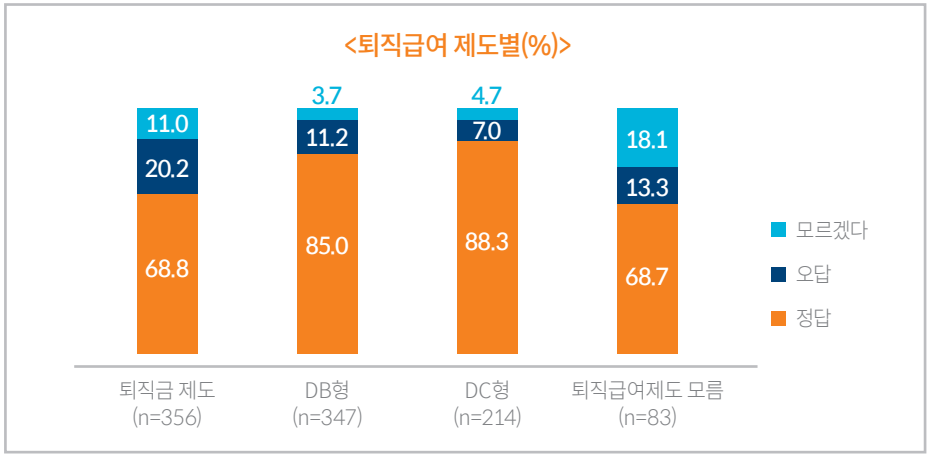
<Q1> 다음 중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 계좌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퇴직금제도
2.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3.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4. 모르겠다

정답: 3.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해설: DC형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급여액의 1/12를 퇴직급여로 이체해준다.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가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퇴직시점의 퇴직급여액이 달라진다.

<전체 응답 분포 (%)>





3050 직장인의 78.6%가 DC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산출기준에 대해 알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78.6%가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제도가 DC형 퇴직연금이라고 답했으며, DB형 퇴직연금(10.3%)이나 퇴직금 제도(3.4%)라고 오답을 택한 비율은 높지 않았다.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7.7% 수준이었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의 정답률이 미가입자보다 높았다. DC형 가입자의 정답률은 88.3%, DB형 가입자의 정답률은 85.0%인데 비해, 미가입자의 정답률은 68.8%에 그쳤다.

【퇴직금·DB형 퇴직급여 산출기준 (정답률 77.2%)】

<Q2> 다음은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산출하는 식입니다.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개월 수를 선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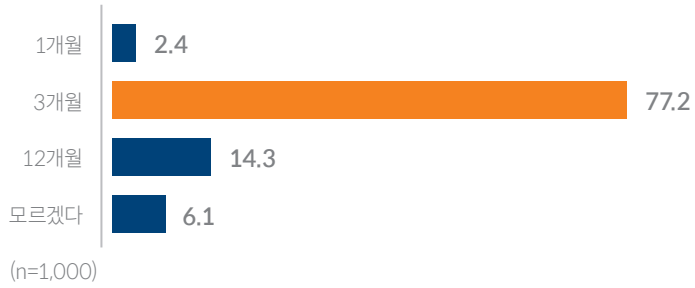
퇴직급여 = 퇴직 전 [ ]개월 평균임금의 30일치 X 근속 연수

1. 1개월
2. 3개월
3. 12개월
4.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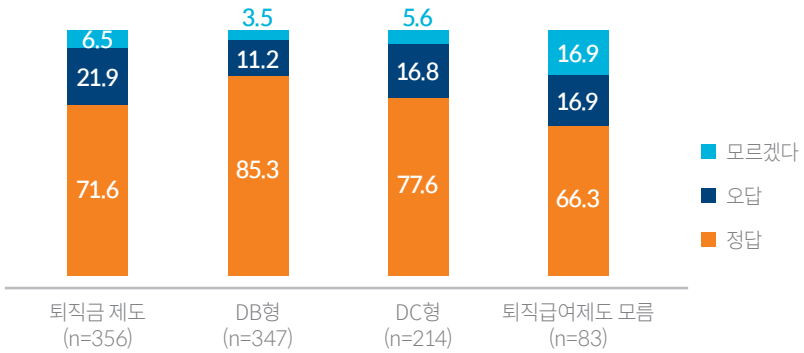
정답: 2. 3개월

해설: 퇴직금 제도와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급여 산출 방식이 동일하다. 퇴직급여는 퇴직 이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산정한다. 이 때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치 급여를 기초로 해서 산출한다.

<전체 응답 분포(%)>



<퇴직급여 제도별(%)>



직장인 중 77.2%는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 제도에 적용되는 퇴직급여 산출 방법을 알고 있었다. '12개월'(14.3%)이나 '1개월'(2.4%)이라는 오답을 택한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정답률은 71.6%로 DB형 가입자(85.3%)보다 비교적 낮았다. 두 제도의 퇴직급여 산출방식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오히려 해당 산출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DC형 가입자의 정답률(77.6%)이 퇴직연금 미가입자보다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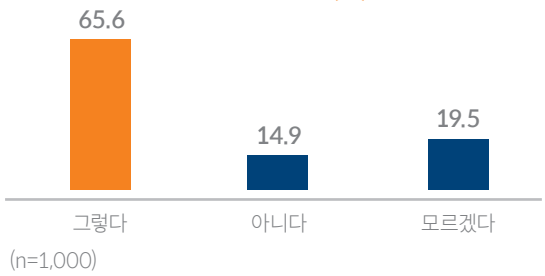
【DB형 vs. DC형 유불리 판단 기준 (정답률 65.6%)】

<Q3> 퇴직금을 운용하여 임금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확정급여형(DB)제도보다 확정기여형(DC) 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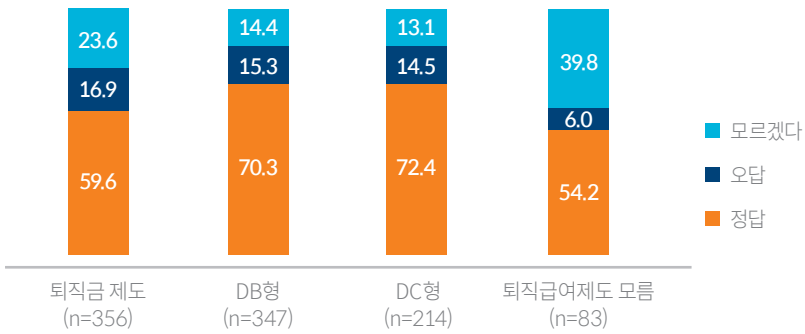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정답: 1. 그렇다
해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퇴직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매년 임금상승률만큼 퇴직급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DC형의 경우 자신의 퇴직급여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액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시점에 수령하는 퇴직급여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하여 임금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면 최종 퇴직급여액이 DB형보다 커지게 되며, 이 경우 DC형 제도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

<전체 응답 분포(%)>



<퇴직급여 제도별(%)>



직장인들에게 DB형과 DC형의 유불리 조건을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65.6%의 응답자가 정답을 맞혔다. 오답을 택한 비율은 14.9%로 낮았으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도 19.5% 수준으로 적지 않았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정답률(DB형 70.3%, DC형 72.4%)은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정답률(59.6%)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자신의 퇴직급여 제도를 모르는 응답자의 경우 정답률이 54.2%에 그쳤다.

【퇴직급여를 IRP에서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정답률 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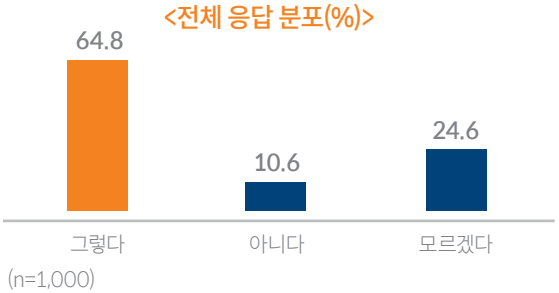
<Q4>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IRP계좌에서 연금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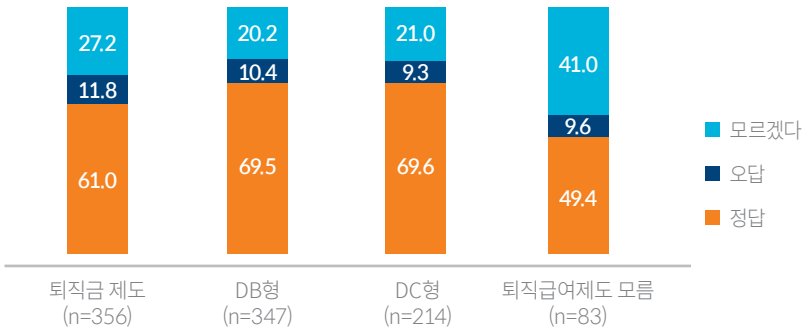
정답: 1. 그렇다

해설: 퇴직급여를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60~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찾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다.

<전체 응답 분포(%)>



<퇴직급여 제도별(%)>



직장인 중 64.8%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에 대해 알고 있었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4.6%, 오답을 택한 비중이 10.6%였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정답률(DB형 69.5%, DC형 69.6%)이 비교적 높았고,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정답률은 61.0%로 낮았다. 자신의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정답률은 49.4%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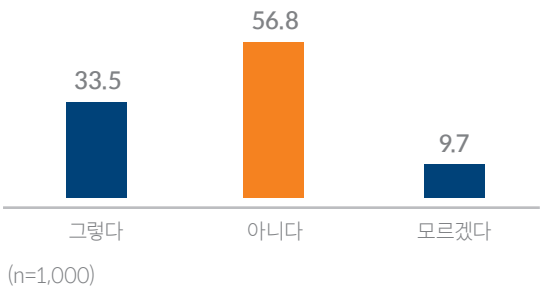
【퇴직급여 중도인출 (정답률 56.8%)】

<Q5> 근로자는 원하면 언제든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중간정산)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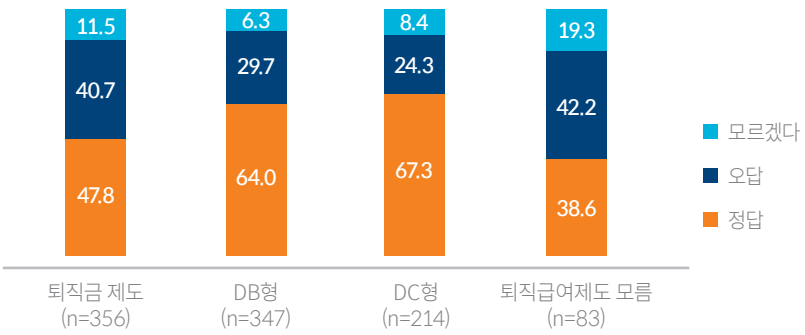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정답: 2. 아니다
해설: 퇴직연금 미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법정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하지만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전체 응답 분포(%)>



<퇴직급여 제도별(%)>



응답자 중 56.8%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33.5%는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9.7%였다. DC형 가입자(67.3%)와 DB형 가입자(64.0%)의 정답률은 높게 나타난 반면, 퇴직연금 미가입자(47.8%)와 자신의 퇴직급여 제도를 모르는 경우(38.6%)의 정답률이 낮았다.

【DB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액 결정요인 (정답률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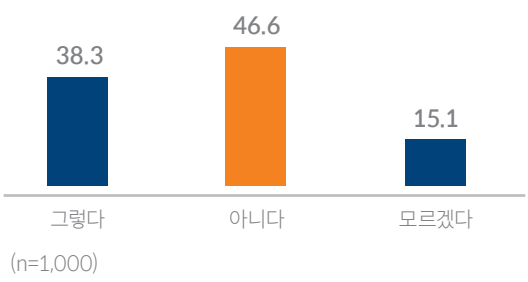
<Q6>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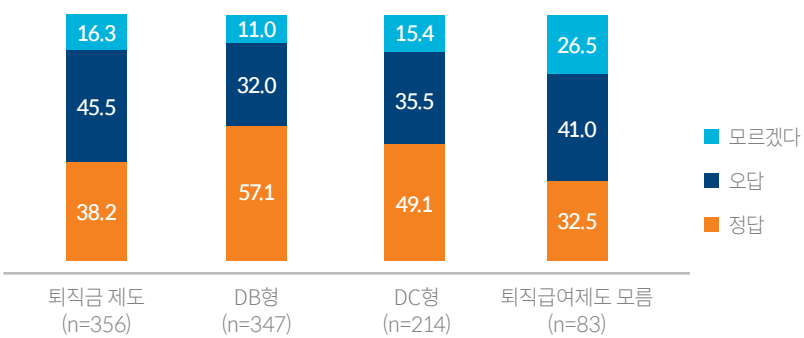
정답: 2. 아니다

해설: DB형 퇴직연금에서 적립금 운용주체는 회사다. 운용성과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산출기준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전체 응답 분포(%)>



<퇴직급여 제도별(%)>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과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 금액은 상관이 없다. 응답자 중 46.6%는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38.3%라는 적지 않은 응답자가 적립금의 수익률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DB형 가입자는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DB형 가입자의 정답률은 57.1%로 가장 높았다. 이후 DC형 가입자(49.1%) 〉 퇴직연금 미가입자(38.2%) 〉 퇴직급여제도 모름(32.5%) 순이었다. DC형 가입자나 퇴직연금 미가입자에 비해 DB형 가입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다만 DB형 가입자 중에서도 32.0%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답했고, 11.0%는 모르겠다고 응답해 낮지 않은 오답률을 보였다.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의 퇴직금 미지급 위험 (정답률 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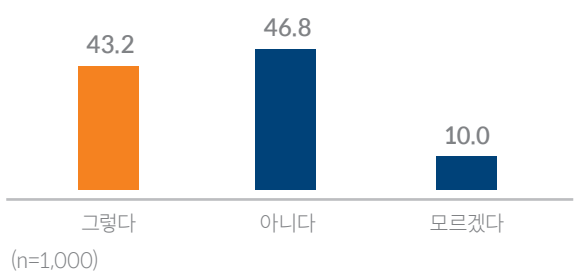
<Q7> 홍길동씨는 현재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퇴직연금 미도입) 만약 이 회사가 갑자기 도산, 폐업하게 되면 홍길동씨는 퇴직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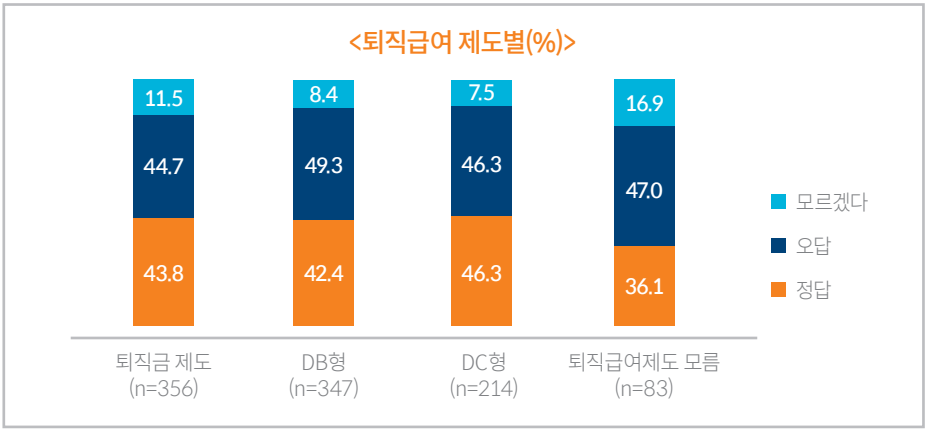
정답: 1. 그렇다

해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장래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내부에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 응답 분포(%)>



(n=1,000)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도산시 퇴직금 미지급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정답률은 43.2%로 낮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고 오답을 택한 비중이 46.8%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정답률이 43.8%로 절반에 못 미쳤다는 점이다. 이 결과를 바꾸어 말하면 퇴직연금 미가입자 중 절반 이상(56.2%)이 회사가 도산, 폐업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정답률은 퇴직연금 가입자(DB형 42.4%, DC형 46.3%)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리 높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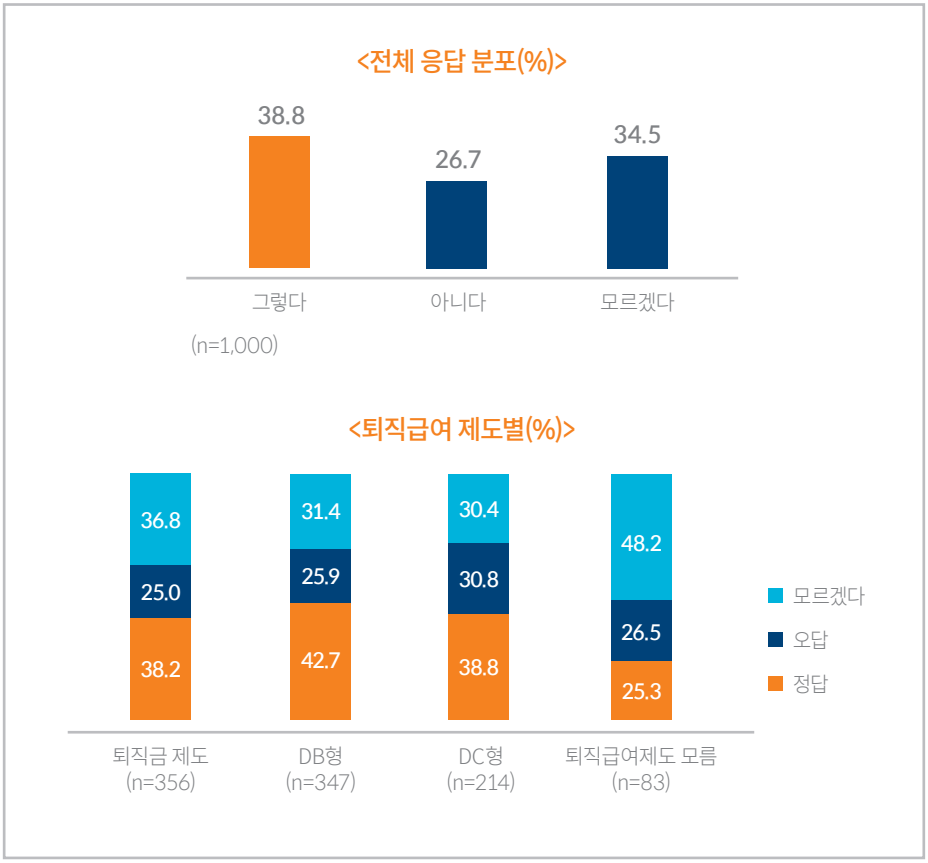
【퇴직급여를 IRP로 수령시 퇴직소득세 납부시기 (정답률 38.8%)】

<Q8>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정답: 1. 그렇다

해설: 퇴직급여는 일시에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다. 퇴직급여를 한번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한다. 반면 퇴직급여를 IRP계좌에 이체하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이 이체된다. 이후 IRP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직장인 중 38.8%만이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26.7%는 IRP계좌로 이체하더라도 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모르겠다'고 답한 비중이 34.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퇴직급여 제도별 정답률은 DB형(42.7%) 〉 DC형(38.8%) 〉 퇴직금 제도(38.2%) 순이었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다.

【DC형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 (정답률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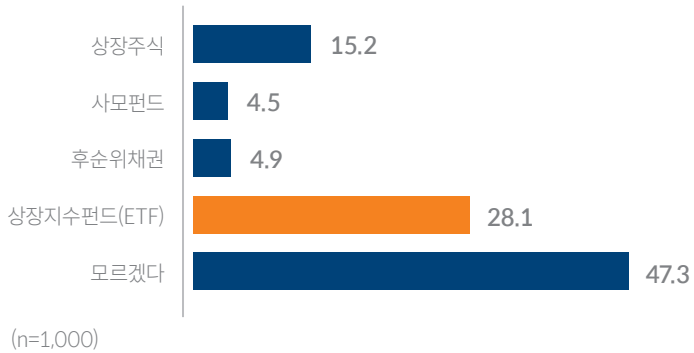
<Q9> 다음의 금융상품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상장주식
2. 사모펀드
3. 후순위채권
4. 상장지수펀드(ETF)
5. 모르겠다

정답: 4. 상장지수펀드(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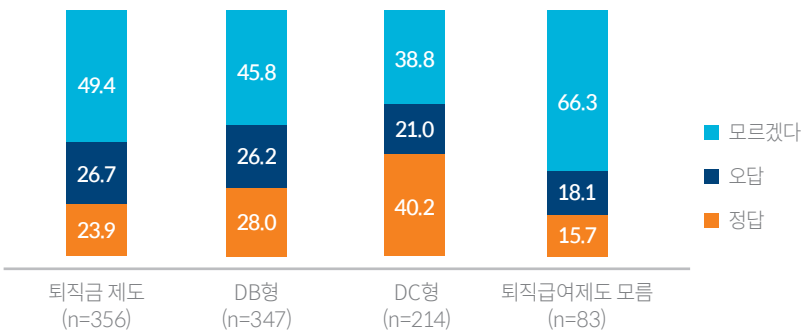
해설: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다. 원리금보장상품, 주식형펀드, ELS,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상장주식이나 사모펀드, 후순위채권에는 투자할 수 없다.

<전체 응답 분포(%)>



(n=1,000)

<퇴직급여 제도별(%)>



DC형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을 묻는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47.3%)는 답변이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ETF에 투자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들의 비중은 28.1% 정도였다. 오답 비중은 상장주식(15.2%) 〉 후순위 채권(4.9%) 〉 사모펀드(4.5%) 순으로 나타났다.

DC형 가입자의 정답률은 40.2%로 DB형 가입자(28.0%)와 퇴직연금 미가입자(23.9%)에 비해 높았다. DC형 가입자 중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38.8%이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정답률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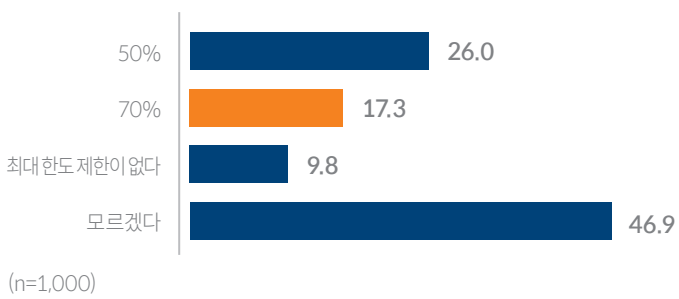
<Q10> 퇴직연금제도(DB,DC)에서 퇴직급여 자금을 위험자산(원리금 비보장)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 50%
2. 70%
3. 최대 한도 제한이 없다
4. 모르겠다

정답: 2.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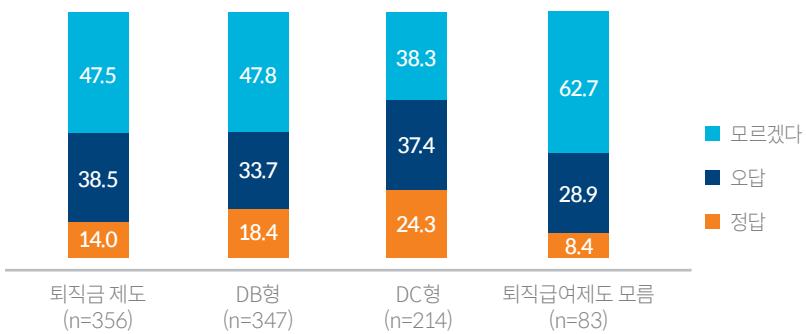
해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에서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은 적립금의 최대 70%이다. 이 때 위험자산은 주식형펀드, ETF, 리츠 등이다.

<전체 응답 분포(%)>



(n=1,000)

<퇴직급여 제도별 정답률(%)>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에서 적립금 중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해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 중 단 17.3%만이 위험자산 한도를 '70%'라고 정확히 답했다. 퇴직급여 관련 문항 중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한편 절반에 가까운 46.9%는 '모르겠다'고 답변했으며, 최대한도가 '50%'(26.0%)라고 답하거나 '최대한도 제한이 없다'(9.8%)고 답하는 등 오답률은 35.8%에 달했다.

다만 DC형 가입자의 정답률은 24.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DC형 가입자 중에는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38.3%, 투자한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37.4%였다.

2. 연금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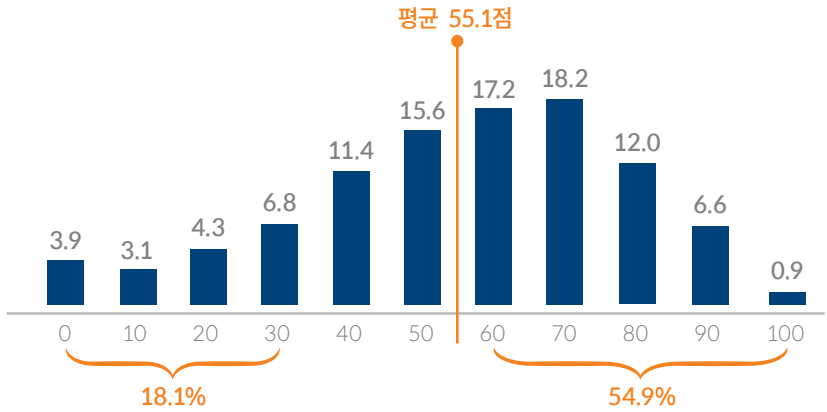
1) 특징

- 연금저축 이해력 평균 점수는 55.1점으로, 연금이해력의 4개 부문 중 가장 높았다.
- 연금저축펀드 가입자의 이해도가 다른 연금저축상품 가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지만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잘 알지 못했다.
-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으나, 과세이연이나 운용에 대한 이해도는 낮았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 중 대표적인 세제혜택 상품이다. 특히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3050 직장인들은 연금저축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연금저축 제도 및 세제, 상품 등 10가지(1문항당 10점)를 물은 결과,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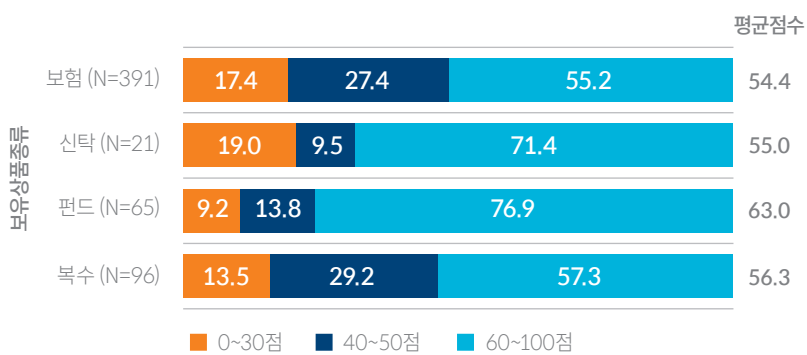
첫째, 연금저축 이해력 점수(55.1점)는 연금이해력의 4개 부문 중 가장 높았다. 연금저축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퇴직연금·IRP(2005년 도입)에 비해 역사가 긴 점, 응답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이 57.3%로 비교적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점수 분포를 보면 40~50점을 받은 응답자가 27.0% 수준이다. 54.9%는 6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연금저축 이해력 평균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4문제 미만을 맞춘 저득점자도 18.1%에 달했다.

<도표 III-4> 연금저축 이해력 점수 분포 (%)



둘째, 연금저축펀드 가입자의 이해도가 다른 연금저축상품 가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연금저축펀드 63.0점 〉 복수 가입 56.3점 〉 연금저축신탁 55.0점 〉 연금저축보험 54.4점' 순이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의 경우 60점 이상 고득점자의 비율이 76.9%로 가장 높았고, 40점 미만 저득점자의 비율은 9.2%로 가장 낮았다.

<도표 III-5> 연금저축상품별 연금저축 이해력 점수 분포 (%)



셋째,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지만 구체적 활용방법은 잘 알지 못했다. 연금저축 제도와 관련해서 연금수령요건이나 중도해지시 불이익에 대해서는 각각 75.1%, 70.2%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반면 연금저축의 납입한도(24.5%)나 세액공제 금액 계산방법(38.3%)처럼 연금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구체적인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넷째,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으나, 과세이연이나 운용에 대한 이해도는 낮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은 81.4%의 정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의 과세이연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49.1%에 그쳤다. 이와 함께 연금저축 상품별 특징에 대해서도 모르는 편이었다. 연금저축보험, 신탁, 펀드 중 실적배당형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은 37.2%에 그쳤다.

<도표 III-6> 연금저축 이해력 문항별 정답률

이해도	구분	질문	정답률
상	제도	자영업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여부	81.4%
상	제도	연금 수령을 위한 가입기간 요건	75.1%
상	세금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	70.2%
상	상품	연금저축펀드의 손익결정 특징	63.5%
중	세금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방식에 따른 세제 차이	56.8%
중	제도	연금저축계좌 이동 가능 여부	54.6%
중	세금	운용 도중 세금 납부 여부	49.1%
하	세금	연금저축에 700만원 납입시 세액공제 금액	38.3%
하	상품	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 중 실적배당형이 아닌 것	37.2%
하	제도	연금저축 최대 납입한도(연간)	24.5%

* 이해도 상: 정답률 60% 이상, 중: 40~60%, 하: 40% 미만

2) 문항별 분석

【연금저축 가입대상 (정답률 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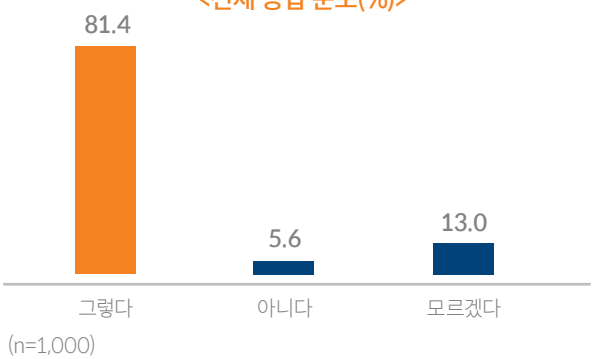
<Q1> 자영업자도 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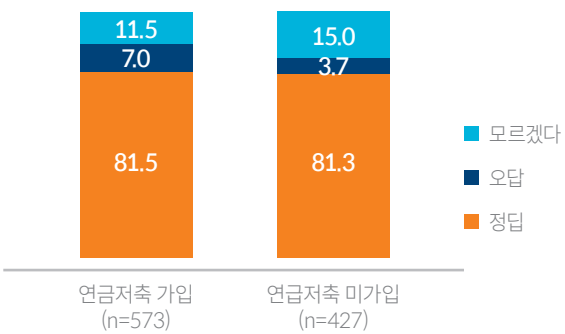
정답: 1. 그렇다

해설: 연금저축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다. 그 중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응답 분포(%)>



<연금저축 가입여부별(%)>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81.4%)이 자영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정답을 맞힌 비중은 연금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가입자 81.5%, 미가입자 81.3%)이었다.

【연금 수령 요건 (정답률 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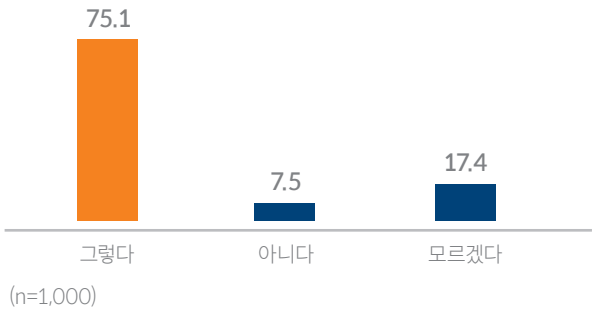
<Q2> 연금저축 적립액을 연금으로 인출하려면 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만 한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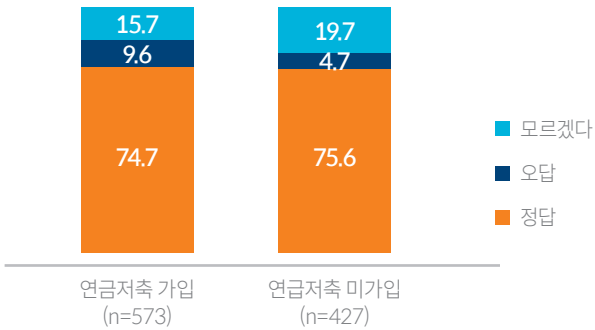
정답: 1. 그렇다

해설: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 이어야 한다.

<전체 응답 분포(%)>



<연금저축 가입여부별(%)>



직장인 중 75.1%가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7.4%, '아니다'라고 오답을 택한 비율은 7.5%로 훨씬 낮았다. 연금저축 가입여부에 따라 정답률이 달라지는 지 살펴본 결과 연금저축 가입자의 정답률(74.7%)과 미가입자의 정답률(75.6%)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중도해지시 과세 (정답률 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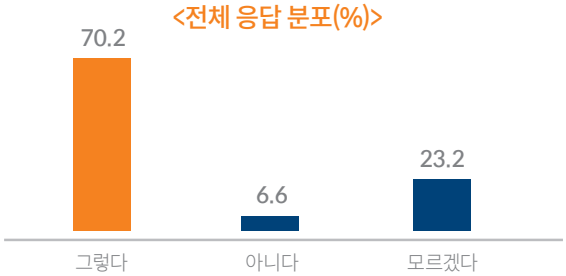
<Q3>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원금과 그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정답: 1.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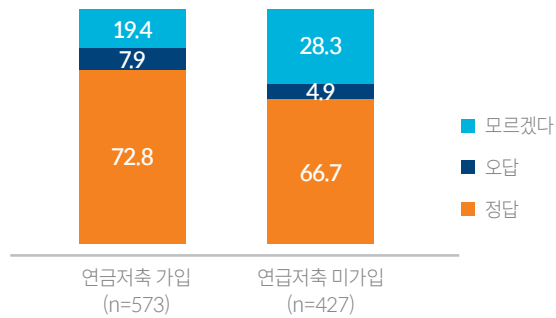
해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전체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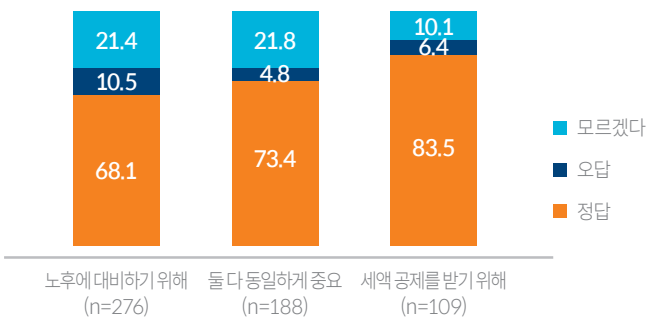


(n=1,000)

<연금저축 가입여부별(%)>



<연금저축 가입 이유별(%)>



직장인 10명 중 7명(70.2%)은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불이익에 관해 알고 있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정답률이 72.8%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66.7%)에 비해 다소 높았다.

연금저축 가입의 주된 이유에 따라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이 달랐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대다수인 83.5%가 중도해지시 불이익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했다고 응답한 경우 68.1% 정도만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세액공제와 노후대비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경우의 정답률은 앞선 두 집단의 중간 정도(73.4%)다. 즉,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해지시 불이익에 대해서도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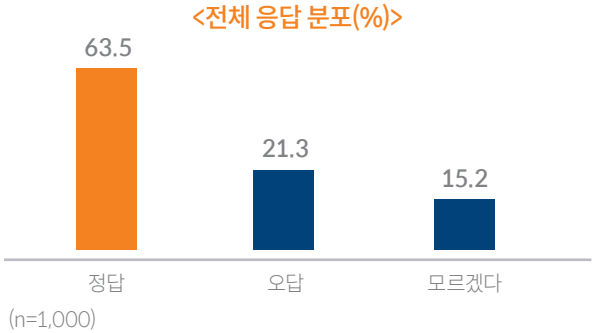
【연금저축펀드의 특성 (정답률 63.5%)】

<Q4> 다음 중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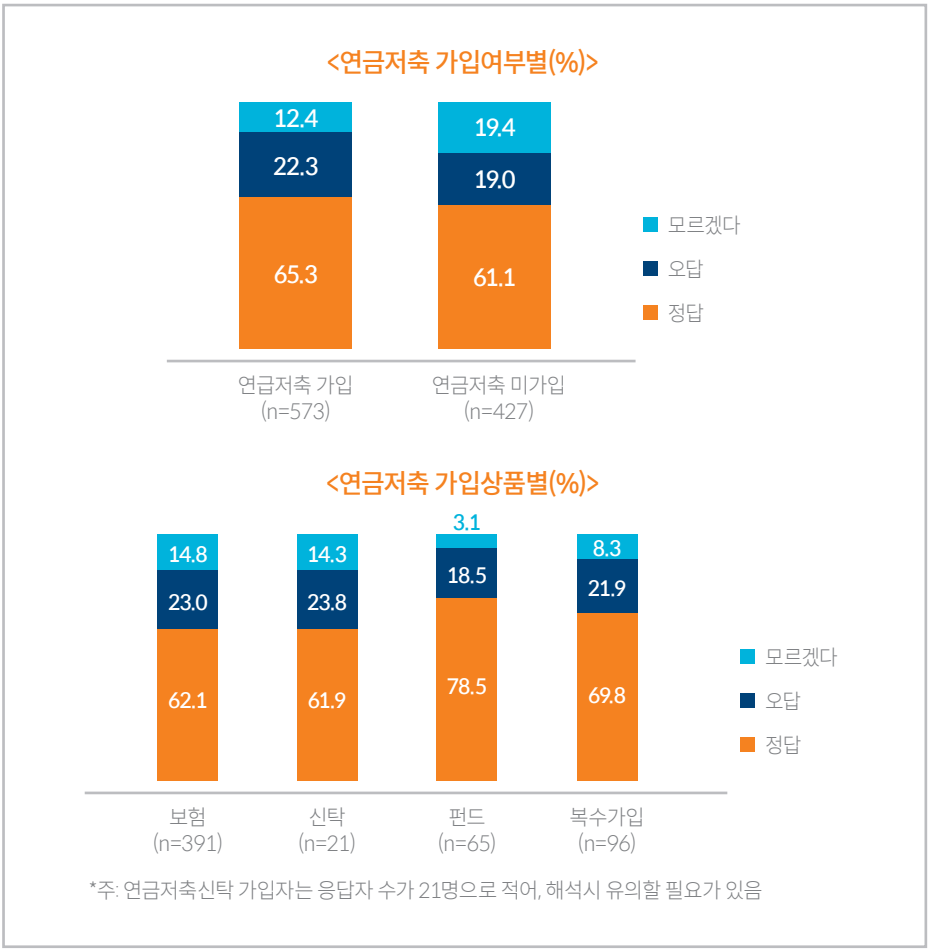
1. 펀드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날 수 있다
2.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적립금을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종신형 연금이란 연금개시 후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함)
4. 모르겠다

정답: 1. 펀드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날 수 있다.
해설: 연금저축에는 펀드·신탁(판매중지)·보험의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기 특성이 다르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본인의 투자결정에 따라 손익이 달라지며,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다.

<전체 응답 분포(%)>



(n=1,000)



연금저축펀드의 중요 특징을 묻는 질문의 정답률은 63.5%로 정답을 맞힌 사람이 3명 중 2명에 못 미쳤다. 연금저축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정답률(각각 65.3%, 61.1%)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단 가입한 상품별로 볼 때, 펀드 가입자의 정답률이 뚜렷하게 높았다. 펀드 가입자의 정답률은 78.5%이며, 다음으로 보험 가입자(62.1%) 〉 신탁 가입자(61.9%) 순이다.

【연금저축 수령방식별 세제 (정답률 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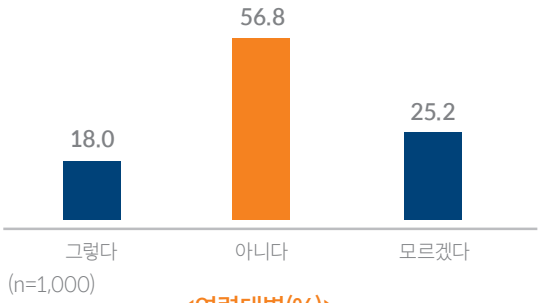
<Q5> 연금저축은 적립액을 인출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지, 연금으로 받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낸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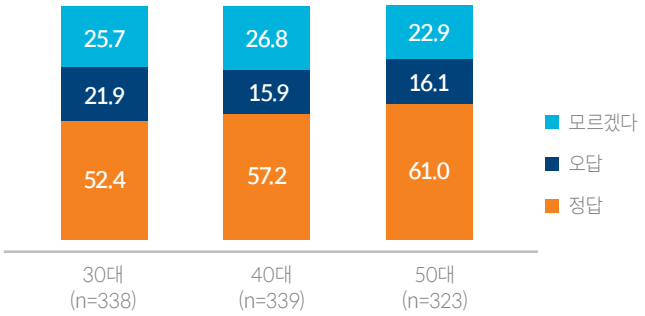
정답: 2. 아니다

해설: 연금저축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때 연금소득에는 3.3~5.5%로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반면 55세 이전에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또는 연금 이외의 다른 형태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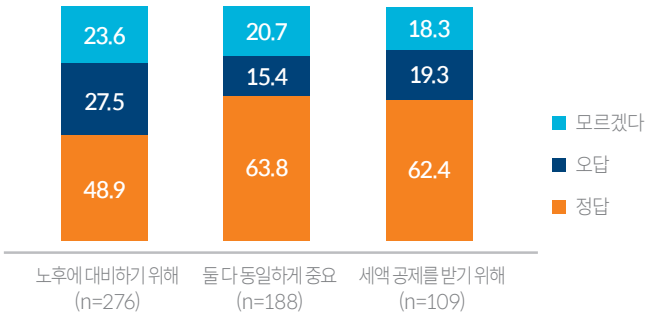
<전체 응답 분포(%)>



<연령대별(%)>



<연금저축 가입 이유별(%)>



연금저축은 수령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응답자 중 절반을 약간 웃도는 56.8%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모르겠다'는 대답은 25.2%였다. 연령별로는 30대(52.4%)보다 40대(57.2%)와 50대(61.0%)의 정답률이 더 높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연금수령 가능 연령(55세)에 가까워지는 만큼, 연금저축 인출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금저축 가입 목적에 따라 정답률 차이가 컸다. 노후대비 목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정답률이 48.9%에 그친 반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경우(62.4%), 세액공제와 노후대비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경우(63.8%)의 정답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큰 가입자들은 연금저축 수령시의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비교적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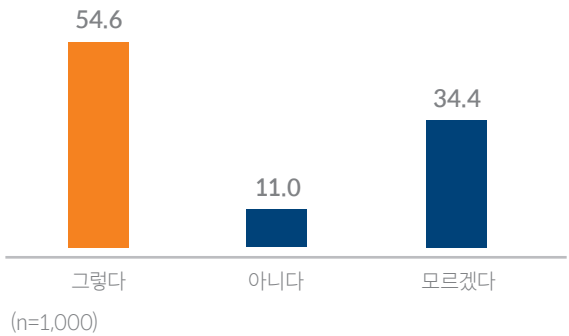
【연금저축 계좌 이전 (정답률 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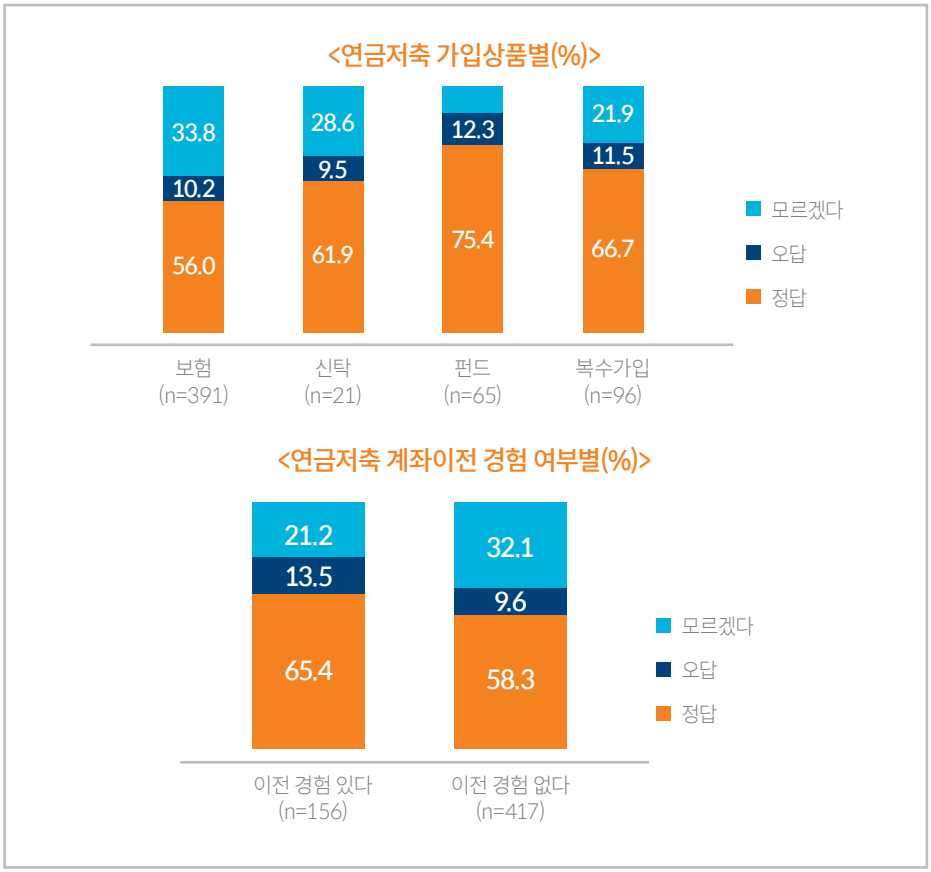
<Q6>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로 옮겨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할 수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정답: 1. 그렇다
해설: 연금저축에는 보험, 신탁, 펀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상품은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세제상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다.

<전체 응답 분포(%)>





직장인에게 연금저축 이전 사례 중 하나로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렇다'고 답해 정답을 맞힌 비율은 54.6%로 대략 절반 수준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11.0%)라고 답한 경우보다 '모르겠다'(34.4%)고 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상품별로는 연금저축펀드 가입자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다. 정답률은 펀드(75.4%) 〉 신탁(61.9%) 〉 보험(56.0%)의 순이다. 또한 연금저축에 가입해 계좌를 이전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정답률이 높았다. 계좌이전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정답률은 65.4%이며, 계좌이전 경험이 없는 경우는 58.3%의 정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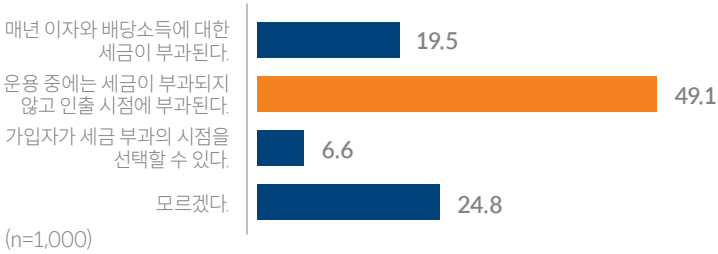
【이자 및 배당소득의 세제 (정답률 49.1%)】

<Q7> 다음 중 연금저축 운용 중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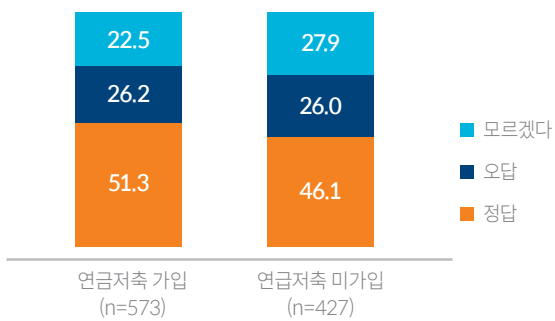
1. 매년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2. 운용 중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인출 시점에서 부과된다.
3. 가입자가 세금 부과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4. 모르겠다.

정답: 2. 운용 중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인출 시점에 부과된다.
해설: 연금저축은 운용단계에서는 수익(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점에 과세한다. 즉,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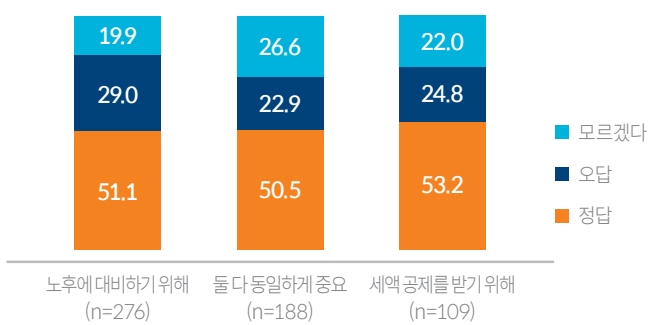
<전체 응답 분포(%)>



<연금저축 가입여부별(%)>



<연금저축 가입 이유별(%)>



연금저축 운용수익(이자 및 배당소득)은 인출 시점에 과세된다. 응답자 중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비중은 49.1%로 절반에 살짝 못 미쳤다. '모르겠다'고 답한 비중도 24.8%로 낮지 않았다. 이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에 관해 묻는 문항(Q1)에서와는 다른 결과다. 세액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81.4%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다.

연금저축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정답률은 각각 51.3%, 46.1%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 점을 보면 전반적으로 연금저축 운용수익 과세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가입 이유별로도 정답률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 (정답률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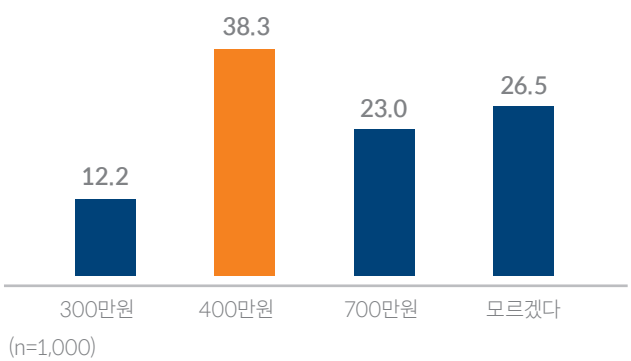
<Q8> 총급여가 6천만원인 40세 직장인 홍길동씨는 올해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이 중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 300만원
2. 400만원
3. 700만원
4.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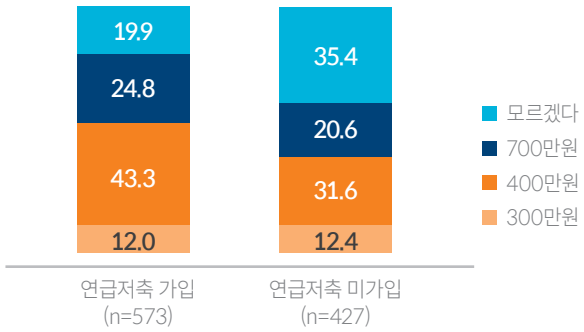
정답: 2. 400만원

해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종합소득이 1억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는 400만원, 소득이 이보다 많은 경우 한도는 300만원이다. 여기에 연령에 따라 만 50세 이상이면 2020~2022년 3년간 추가로 2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가 더해진다. 홍길동씨는 50세 이하로 소득이 6천만원이므로 세액공제 금액은 400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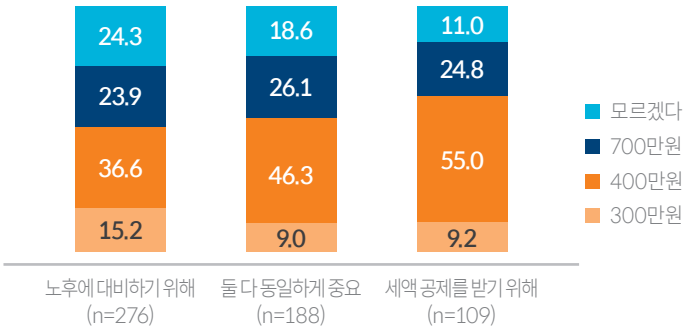
<전체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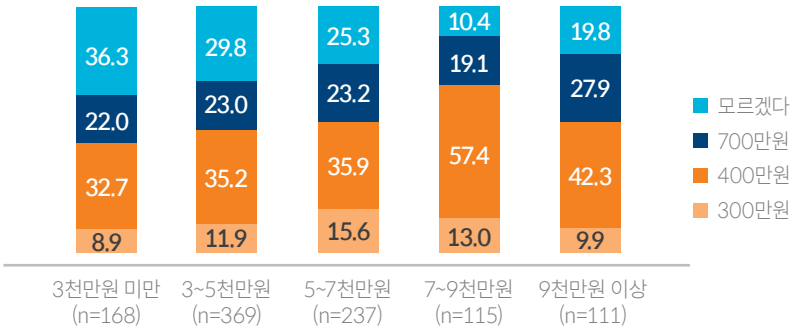
<연금저축 가입여부별(%)>



<연금저축 가입이유별(%)>



<연소득구간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사례를 활용해 물었을 때, 정답인 '400만원'을 맞힌 비율은 38.3%에 그쳤다. 세액공제 제도가 계속 변화해온 만큼, 직장인들이 현재 세액공제 금액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700만원'이라는 응답이 23.0%를 차지했다. 700만원은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합한 금액이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정답률이 43.3%로 미가입자(31.6%)에 비해 높았으며, 가입자 중에서도 특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정답률은 55.0%로 가장 높았다. 세액공제에 관심이 있었던 만큼, 세액공제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중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이 7~9천만원인 직장인의 정답률이 57.4%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들은 다른 세제 관련 문항에서도 대체로 높은 정답률을 보여, 절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답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정답률은 '3천만원 미만(32.7%) < 3~5천만원(35.2%) < 5~7천만원(35.9%) < 7~9천만원(57.4%)' 순이다. 단, 최상위인 연소득 9천만원 이상 구간에 들어서면 오히려 정답률이 다소 하락해 42.3%에 그친 점이 흥미롭다. 소득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항목 하나하나에 일일이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실적배당형 연금저축상품이 아닌것 (정답률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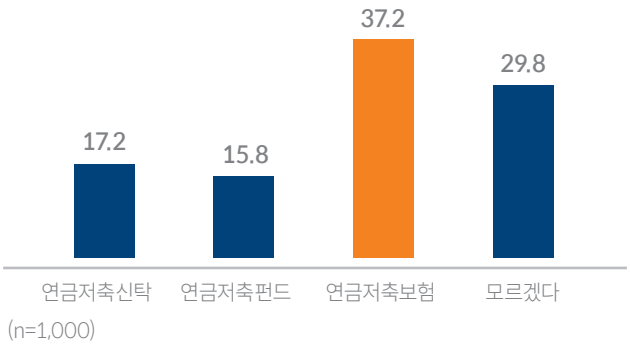
<Q9> 다음 중 실적배당형 연금저축상품이 아닌 것은? (실적배당형이란 자금 운용성과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지는 운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1. 연금저축신탁
2. 연금저축펀드
3. 연금저축보험
4. 모르겠다

정답: 3. 연금저축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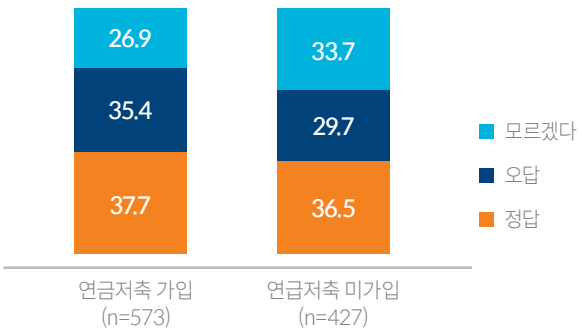
해설: 3가지 종류의 연금저축 중 연금저축보험은 금리형으로 운용된다. 반면, 연금저축신탁(판매중단)은 대부분 채권으로 운용되지만 주식을 최대 10%까지 편입할 수 있어, 실적배당상품으로 본다.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정한 포트폴리오로 운용되므로 실적배당상품이다.

<전체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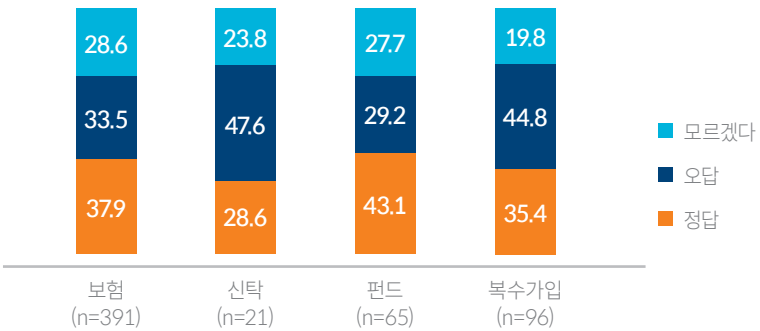


(n=1,000)

<연금저축 가입여부별(%)>



<연금저축 가입상품별(%)>



연금저축 상품 3가지의 특성을 각각 잘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답을 맞힌 비율이 37.2%다. 실적배당형이 아닌 상품으로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한 오답률은 33.0%에 달해 정답률보다 많이 낮지 않았다.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29.8%였다.

연금저축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정답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가입자를 가입 상품별로 나누어본 경우 펀드 가입자의 정답률이 43.1%로 가장 높았다.

【연간 납입한도 (정답률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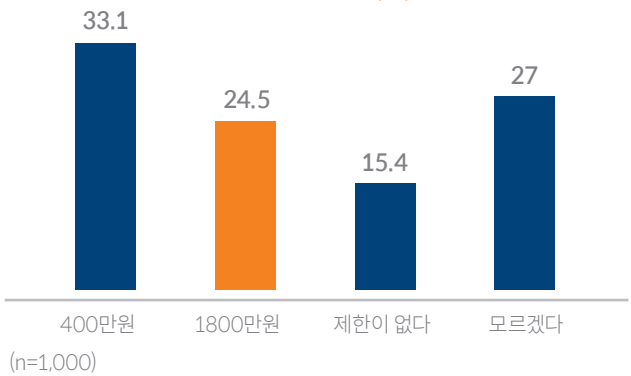
<Q10> 한 해 동안 연금저축에 저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 400만원
2. 1800만원
3. 제한이 없다
4.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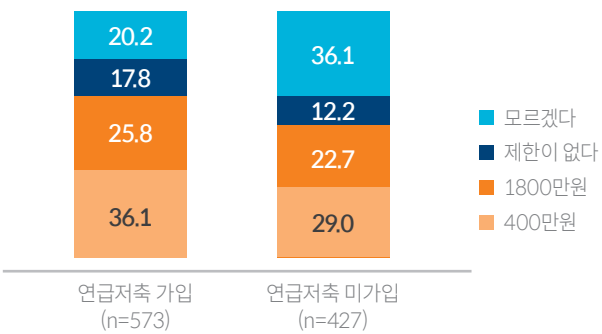
정답: 2. 1800만원

해설: 연금저축계좌에 1년 동안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이다. 또한 이 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인 경우 300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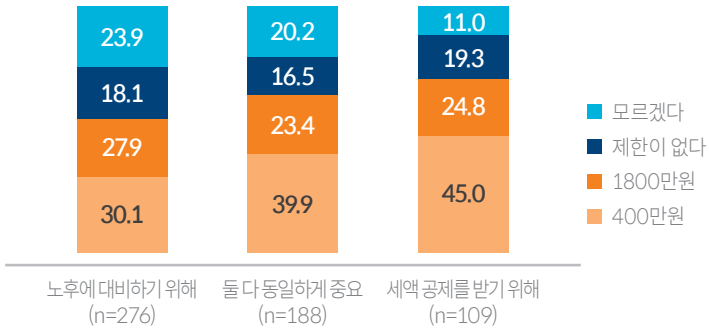
<전체 응답 분포(%)>



<연금저축 가입여부별(%)>



<연금저축 가입 이유별(%)>



연금저축에 한 해 동안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인데, 전체 응답자 중 24.5%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보다 오답 중 하나인 400만원을 택한 비율(33.1%)이 더 높았다. 400만원은 다름아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이다. 세액공제한도와 납입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연금저축 가입자에게서 이러한 오해가 오히려 더 컸다는 점이다. 연금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400만원을 택한 비율이 29.0%였지만, 가입자는 이보다 높은 36.1%에 달했다. 가입자 중에서도 가입이유로 '세액공제'를 꼽은 집단에서 400만원을 택한 비율이 45.0%로 가장 높았다.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에 주로 관심이 많을수록 오해가 컸던 셈이다. 가입자들이 연금저축을 노후를 위한 저축상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세액공제 상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 IRP

1)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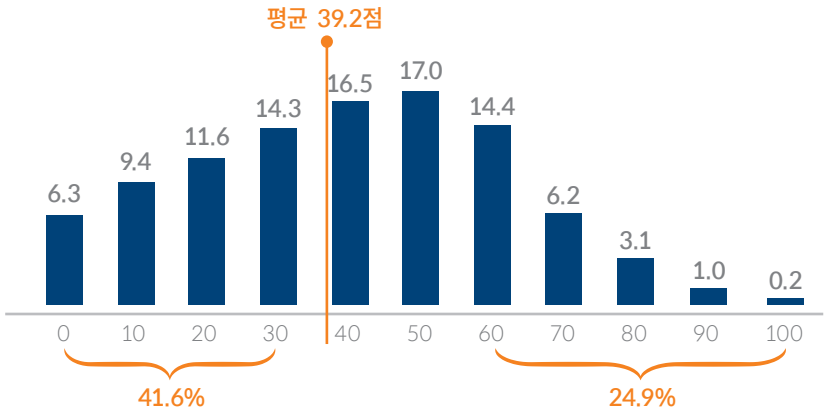
- IRP 이해력 점수는 평균 39.2점으로 연금이해력의 4개 부문 중에서 가장 낮았다.
- IRP 가입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정답률이 낮았고, 자산운용과 관련된 문항의 정답률이 특히 저조했다.
- 연금저축과 연계해 IRP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다.
- 다른 연금이해력 부문에 비해 '모르겠다'고 답한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도 있고 개인이 노후자금을 추가로 저축할 수도 있는 계좌다. 특히 개인의 추가납입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금감원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IRP 적립금 규모는 255.5조원으로, 전년 대비 35.5% 늘어나는 등 큰 폭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이 같은 IRP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IRP 이해력 점수는 평균 39.2점으로 4개 부문 중 가장 낮았다. 평균적으로 10문제 중 4문제 미만을 맞춘 셈이다. IRP는 2005년 도입 당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나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7년 제도 개편 이후에 자영업자나 공무원 등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었다. 즉 IRP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기간이 비교적 짧아, IRP에 대한 이해도 역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금저축만으로도 세액공제 한도(400만원)가 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IRP 추가납입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 점도 이해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점수 분포를 보면 고득점자보다는 저득점자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다. 응답자의 41.6%가 4문제 미만을 맞혀 낮은 점수대에 많은 인원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40~50점대 득점 비율은 33.5%였으며, 4명 중 1명(24.9%) 정도만 6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표 III-7> IRP 이해력 점수 분포 (%)



둘째, IRP 가입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정답률이 낮았고, 자산운용과 관련된 문항의 정답률이 특히 저조했다. IRP 가입대상을 묻는 문항의 정답률이 66.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22.3%),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정답률 16.5%) 등 운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셋째, 연금저축과 연계해 IRP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다. IRP는 연금저축과 연계하여 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가 정해진다. 두 상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합산 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연계해 IRP 세액공제한도를 묻는 문항의 정답률은 31.6%, 납입한도의 정답률은 16.8%에 그쳐 이해도가 매우 낮았다.

넷째, 다른 연금이해력 부문에 비해 '모르겠다'고 답한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앞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부문의 경우 전 문항에 걸쳐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평균 22.1%, 23.7%였지만 IRP는 이 비율이 29.8%로 비교적 높았다. 문항에 대한 답을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보와 지식이 부족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도표 III-8> IRP 이해력 문항별 정답률

이해도	구분	질문	정답률
상	제도	IRP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	66.5%
상	상품	금융회사별 IRP 계좌 내 투자상품 차이	61.8%
중	제도	IRP계좌 적립금 중도인출시 세제불이익	54.0%
중	세금	IRP계좌의 이자와 배당 수익 미인출시 세제	47.1%
중	세금	IRP에서 1500만원 연금수령시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41.2%
하	제도	IRP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최소 연령	34.3%
하	세금	200만원 연금저축납입 후 IRP에 가입하여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	31.6%
하	제도	IRP계좌 적립금 전액을 주식형 펀드로 운용 가능한지 여부	22.3%
하	제도	연금저축 400만원 납입시 IRP에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	16.8%
하	상품	IRP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닌 것	16.5%

*이해도 상: 정답률 60% 이상, 중: 40~60%, 하: 40%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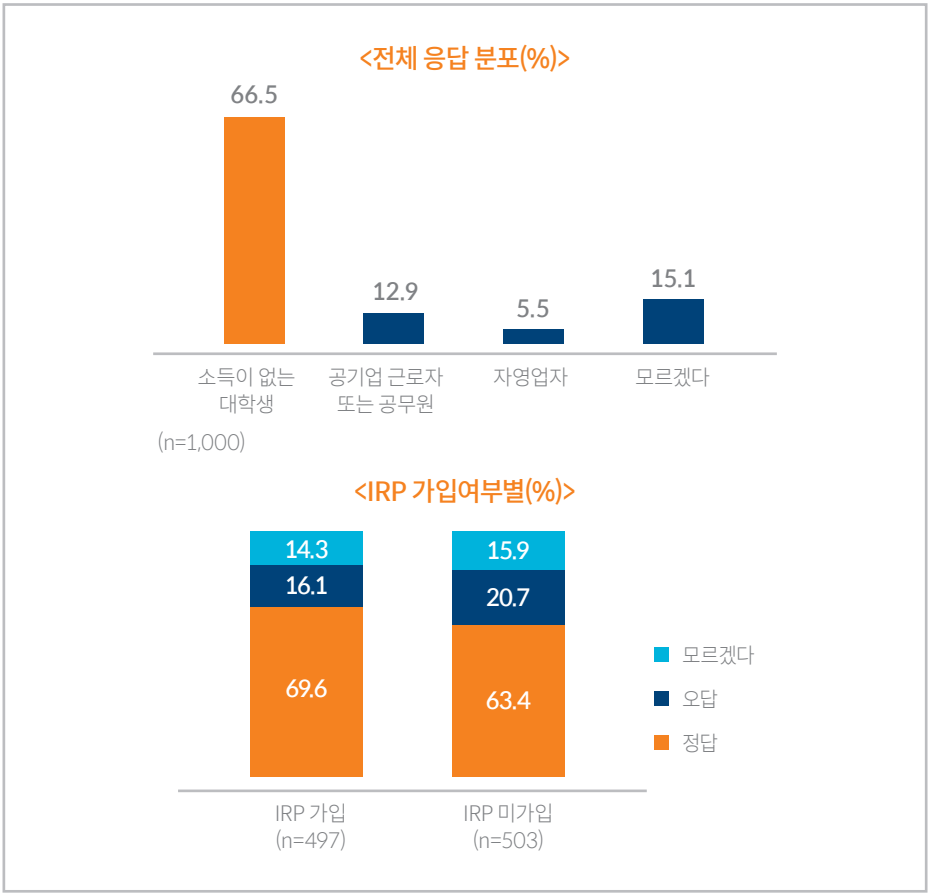
2) 문항별 분석

【IRP 가입대상 (정답률 66.5%)】

<Q1> 다음 중 IRP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1. 소득이 없는 대학생
2. 공기업 근로자 또는 공무원
3. 자영업자
4. 모르겠다

정답: 1. 소득이 없는 대학생
해설: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대부분 IRP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IRP에 가입할 수 없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공무원 및 공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중 IRP 가입이 불가능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66.5%)은 정답인 '소득이 없는 대학생'을 선택했다. IRP 관련 문항 중 가장 높은 정답률이다. 보기 중 '공무원 및 공기업 근로자'(12.9%)나 '자영업자'(5.5%)의 경우 2017년 이후 가입이 가능해졌는데, 응답자들이 이러한 오답을 택한 비율이 낮은 것을 보면 이 사실에 대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RP 가입자의 정답률은 69.6%이며, 미가입자는 이보다 낮은 63.4%를 기록했다. IRP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IRP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는 편이다.

【금융회사별 IRP 투자상품 차이 (정답률 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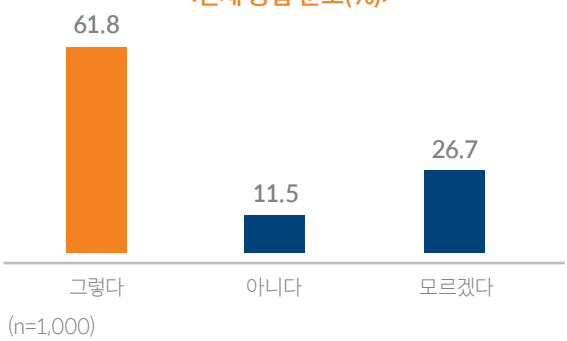
<Q2> 금융회사 별로 IRP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예금, 펀드, ETF, 보험 등)이 다르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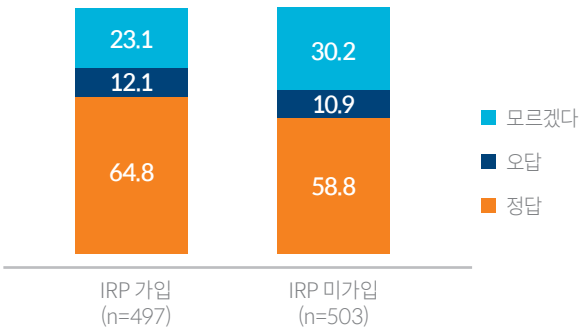
정답: 1. 그렇다

해설: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금융회사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투자 가능한 상품군이 조금씩 다르다. 예적금과 펀드 등은 3개 금융업권에서 전부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배당보험은 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또 ETF 및 ETN, 리츠 등은 증권사에서만 투자할 수 있다.

<전체 응답 분포(%)>



<IRP 가입여부별(%)>



직장인 5명 중 3명(61.8%)는 금융회사에 따라 IRP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르겠다'로 응답한 비율은 26.7%로 높지 않았다. IRP 미가입자에서 '모르겠다'는 응답이 30.2%로 나와 가입자(23.1%)에 비해 많았다.

【중도인출시 불이익 (정답률 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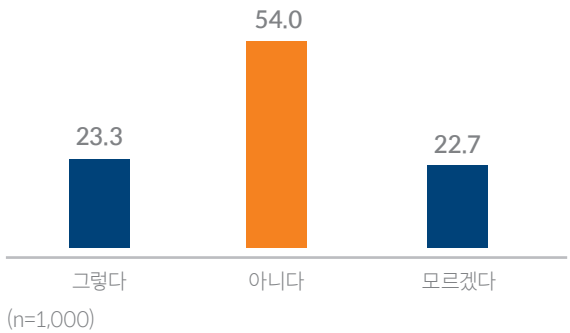
<Q3> IRP계좌 적립금은 세제상 불이익없이 자유롭게 중도인출 할 수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정답: 2.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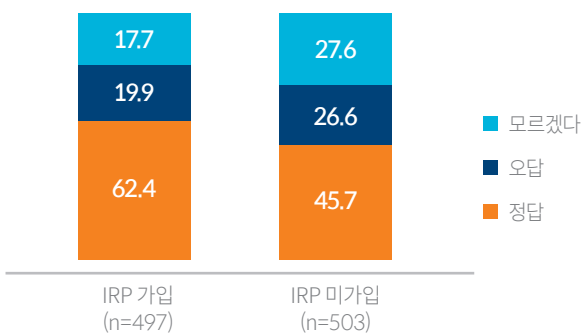
해설: IRP에 추가로 적립한 금액과 운용수익은 법정 중도인출 사유[6]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출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그 수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전체 응답 분포(%)>



(n=1,000)

<IRP 가입여부별(%)>



6 IRP의 법정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인출횟수는 1회 한정)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 천재지변

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제상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중은 54.0%이다. 23.3%는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도 22.7%로 적지 않았다. IRP 가입자의 정답률은 62.4%로 미가입자(45.7%)에 비해 높았다.

【이자와 배당소득 세제 (정답률 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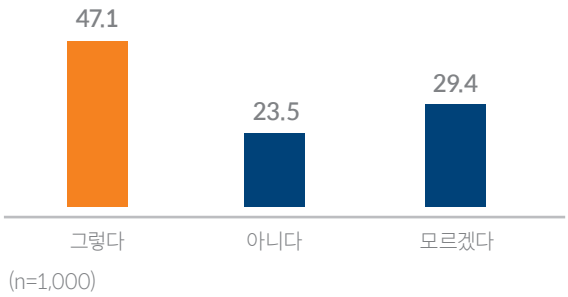
<Q4> IRP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수익은 계좌 밖으로 인출하지 않는 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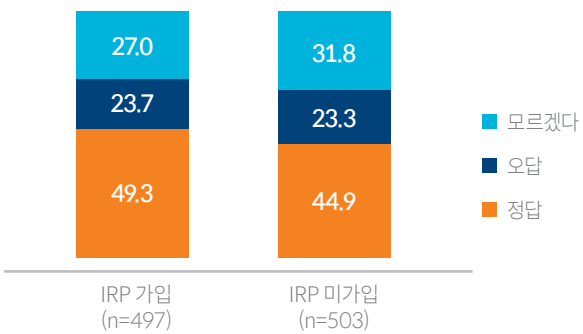
정답: 1. 그렇다

해설: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IRP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적립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이 때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중도인출 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전체 응답 분포(%)>



<IRP 가입여부별(%)>



응답자 절반 정도(47.1%)는 IRP 운용수익의 과세이연 효과를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르겠다'는 응답이 29.4%로 적지 않았고, 오답을 택한 비율도 23.5%였다. IRP 가입자(49.3%)가 미가입자(44.9%)보다 정답률이 소폭 높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다.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기준 (정답률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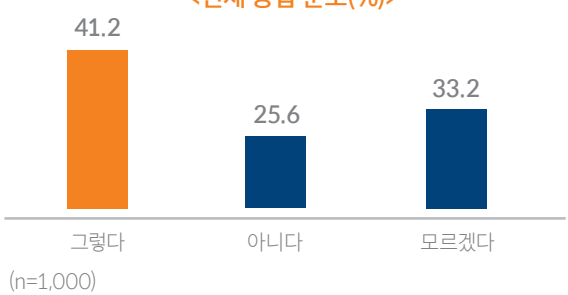
<Q5> 65세인 김철수씨는 지난해 IRP에서 총 150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 김철수씨가 수령한 1500만원의 연금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IRP 자금은 김철수씨가 개인적으로 납입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그 수익금이며, 연금수령액은 연금수령한도 이내이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정답: 1.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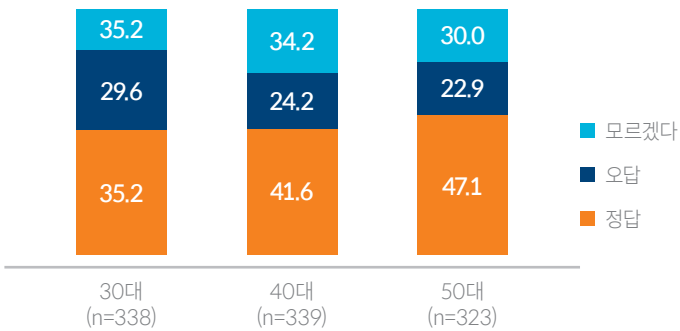
해설: IRP의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때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수령한 연금액이 한 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따라서 김철수씨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므로 연금수령액 전체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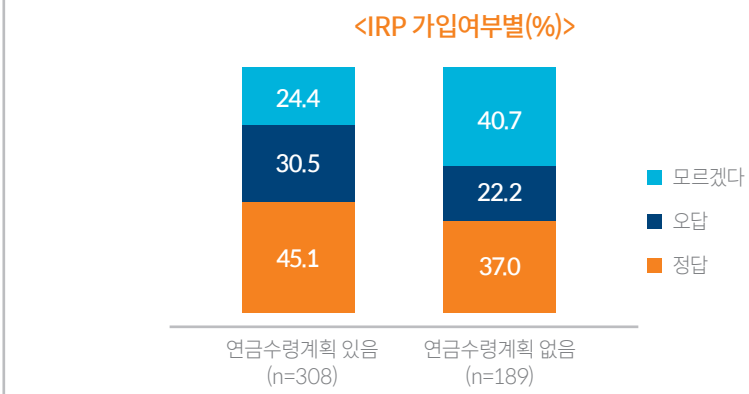
<전체 응답 분포(%)>



(n=1,000)

<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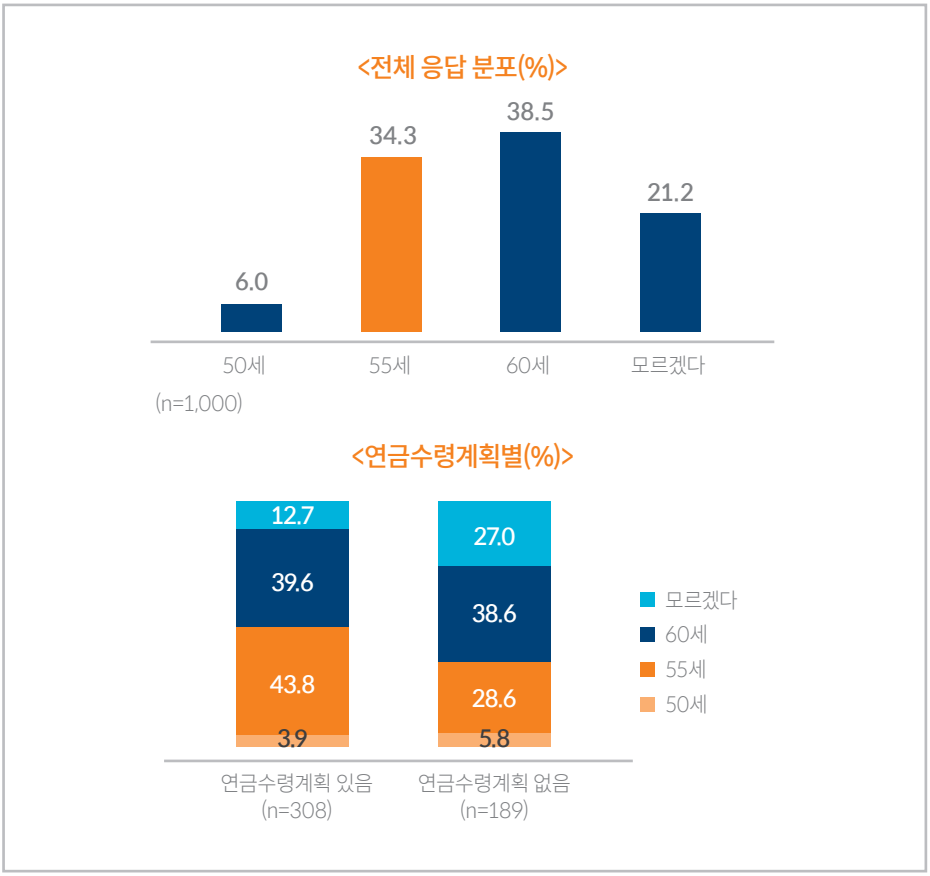
IRP에서 받는 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이 한 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41.2%에 그쳤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33.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연금수령시기에 임박한 50대의 정답률이 47.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연금수령계획이 있는 사람(정답률 45.1%)이 그렇지 않은 사람(정답률 37.0%)보다 이해도가 높았다. 특히 연금수령계획이 없는 사람의 경우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40.7%에 달했다.

【IRP 연금수령 최소연령 (정답률 34.3%)】

<Q6> IRP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최소연령은?

1. 50세
2. 55세
3. 60세
4. 모르겠다

정답: 2. 55세
해설: IRP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IRP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물었을 때, 정답률은 34.3%로 낮은 편이었다. 정답인 55세보다 오답인 60세로 답한 사람(38.5%)이 오히려 더 많았다. 과거 기업의 퇴직연령이나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60세로 했던 점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연금수령을 계획 중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연금수령 기준을 잘 알고 있었다. 연금수령계획이 있는 경우 정답률은 43.8%였는데, 이는 계획이 없는 경우(28.6%)에 비해 15.2% 포인트 높은 수치다.

【연금저축과 연계한 IRP 세액공제 대상금액 (정답률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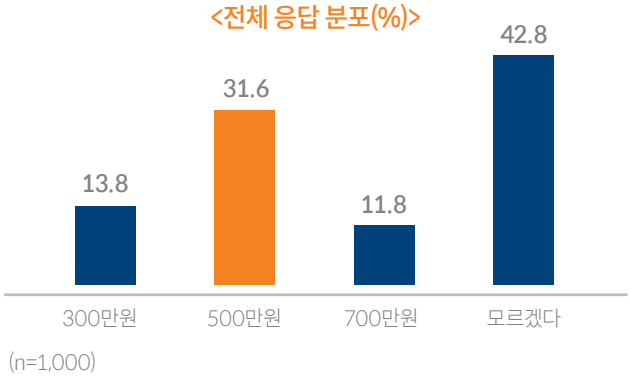
<Q7> 총급여가 6천만원인 40세 직장인 홍길동씨는 올해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계획입니다. 홍길동씨가 IRP에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은 최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 300만원
2. 500만원
3. 700만원
4. 모르겠다

정답: 2. 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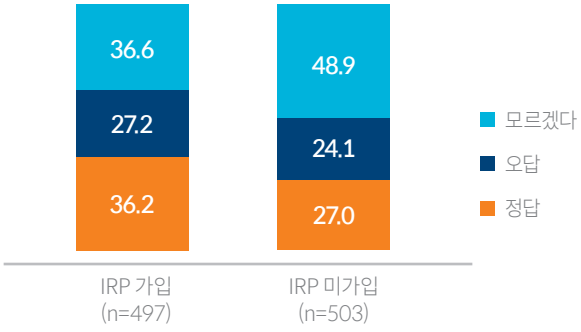
해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연계하여 결정된다. 40세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홍길동씨의 경우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저축하였으므로 IRP에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다.

<전체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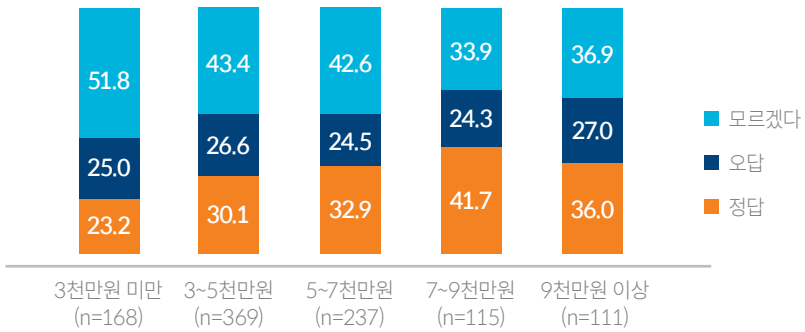


(n=1,000)

<IRP 가입여부별(%)>



<연소득 구간별(%)>



IRP와 연금저축의 합산 세액공제 한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31.6%로 낮았다. 이 문항에서 '모르겠다'고 답한 비중은 42.8%에 달했다. 그 외에도 '700만원'(11.8%)이나 '300만원'(13.8%) 등 오답을 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IRP 가입자의 정답률은 36.2%로 미가입자(27.0%)에 비해 높았다. 또한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정답률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연소득이 7~9천만원 사이인 직장인의 정답률이 41.7%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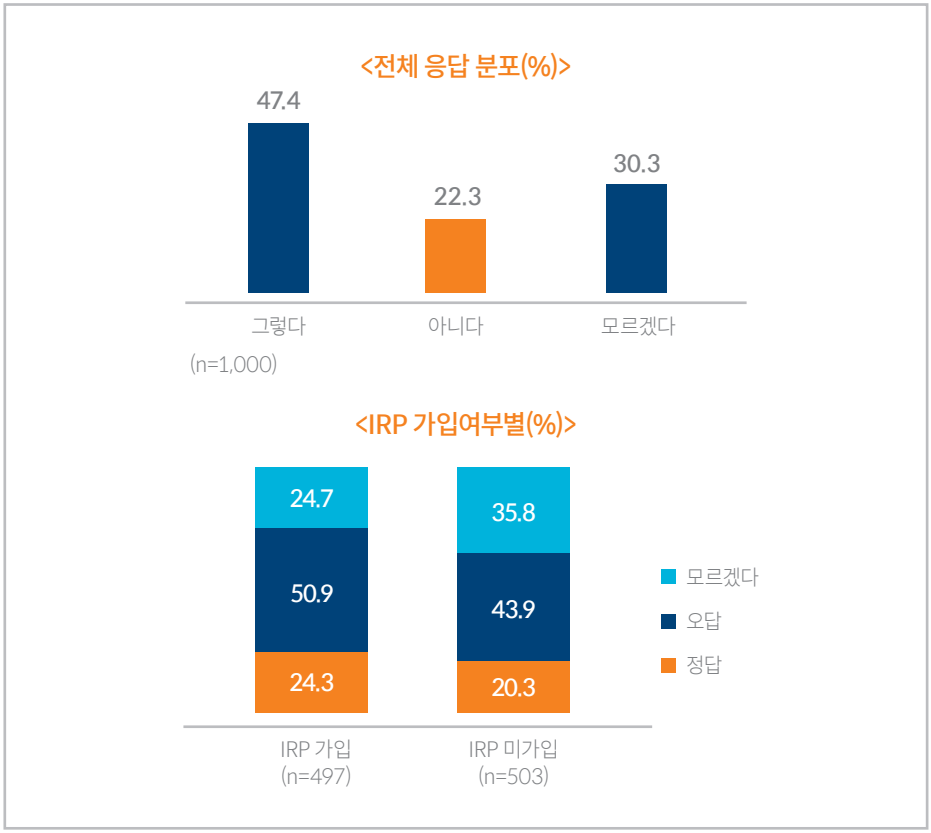
【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정답률 22.3%)】

<Q8> IRP계좌 적립금은 전액을 주식형 펀드로 운용할 수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정답: 2. 아니다

해설: IRP 적립금은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이 때 위험자산이란 주식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펀드와 ETF, 리츠 등을 말한다. 주식 비중이 40% 이내인 펀드나 예금 등은 투자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식형 펀드는 퇴직연금 운용에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IRP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응답자 중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22.3%로 비중이 매우 낮았다. 이의 두 배에 가까운 47.4%가 적립금을 100% 다 투자할 수 있다고 잘못 답했으며, '모르겠다'(30.3%)는 응답이 정답보다도 많았다.

IRP 가입자의 경우 IRP에 가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은 24.3%에 불과했으며, 위험자산 한도가 없다고 오해한 비중이 50.9%로 오히려 미가입자(43.9%)보다 높았다.

【연금저축과 연계한 IRP 연간 납입한도 (정답률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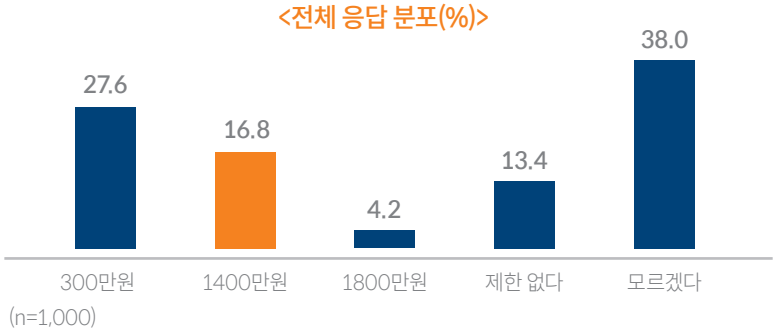
<Q9> 홍길동씨가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IRP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 300만원
2. 1400만원
3. 1800만원
4. 제한 없다
5.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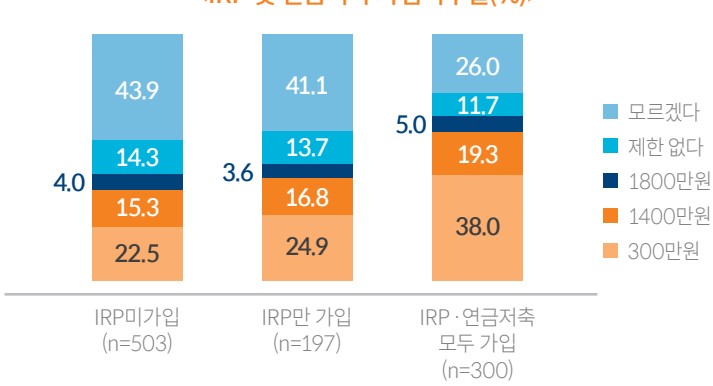
정답: 2. 1400만원

해설: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한 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원이다. 홍길동씨가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으므로 IRP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400만원이다.

<전체 응답 분포(%)>



<IRP 및 연금저축 가입여부별(%)>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한도 및 활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많았고, 정답인 '1400만원'을 맞춘 비중은 16.8%에 그쳤다. 주목할 점은 세액공제한도와 납입한도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보기 중 '300만원'(27.6%)을 택한 응답자들은 납입한도가 1800만원이 아닌 700만원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4명 중 1명이 세액공제 한도를 납입한도로 오인하는 셈이다.

IRP에만 가입한 사람을 따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정답률은 16.8%에 그쳤고, IRP와 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들 역시 정답률은 19.3%에 그쳤다. 둘 다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도 38.0%가 세액공제 한도를 납입한도로 오해하고 있었다.

【IRP 투자가능상품 (정답률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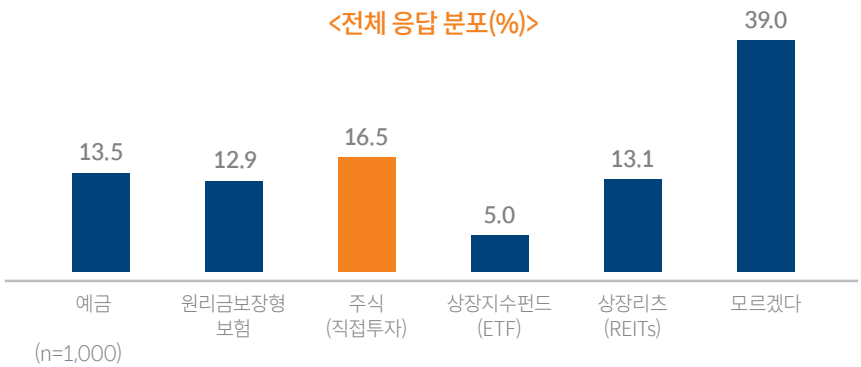
<Q10> 다음 중 IRP계좌에 편입할 수 없는 금융상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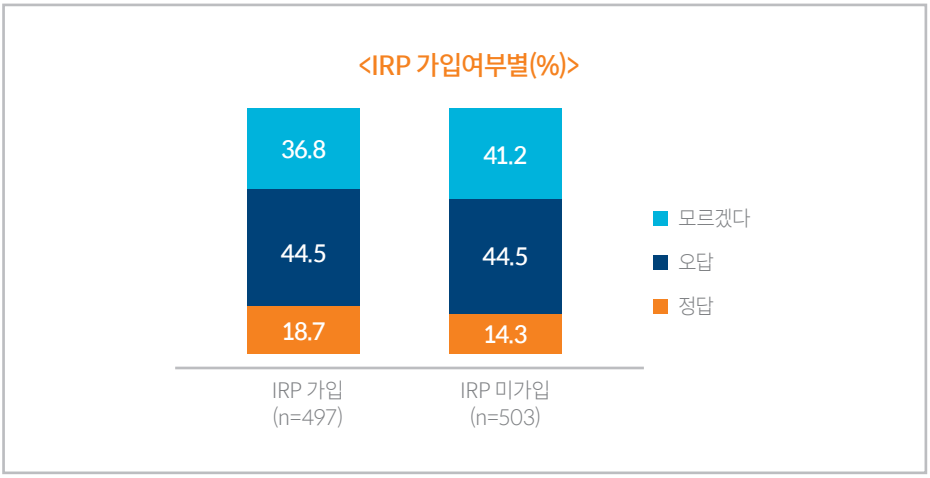
1. 예금
2. 원리금보장형 보험
3. 주식
4. 상장지수펀드(ETF)
5. 상장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6. 모르겠다

정답: 3. 주식

해설: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 일반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리츠 등이다. 반면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으며, 상장지수펀드 중에서도 레버리지나 인버스 펀드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다.

<전체 응답 분포(%)>





직장인 중 IRP에서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16.5%였다. 이는 IRP 관련 문항 중 가장 낮은 정답률이다. 반면 '모르겠다'는 응답이 39.0%로 가장 많았다. 예금(13.5%)이나 상장리츠(13.1%) 등 투자 가능한 상품을 투자 불가능한 상품으로 오인한 경우는 총 44.5%에 달했다. 다만 IRP 가입자의 정답률은 18.7%로 IRP 미가입자(14.3%)보다 4.4% 포인트 높았다.

4. 공적연금 등 기타

1)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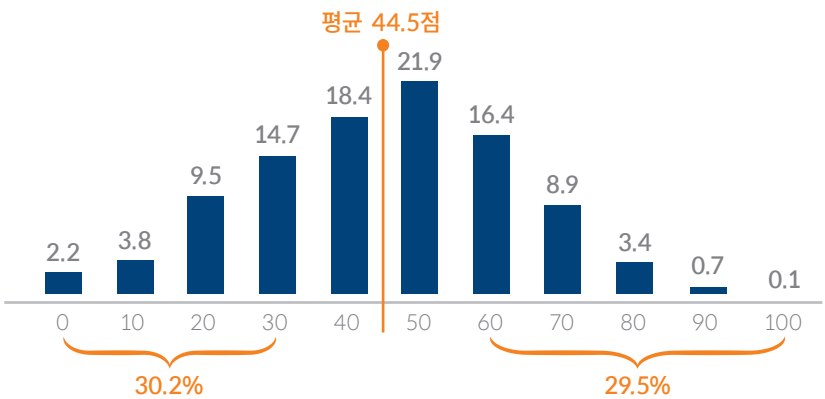
- 공적연금 등 기타 부문의 연금이해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44.5점이다.
- 연령별로는 50대, 가입상품별로는 두 종류 이상의 사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들의 이해력 점수가 높았다.
- 연금 수령에 관한 문항의 정답률이 특히 저조했다.

'공적연금 등 기타' 부문에서는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연금보험, 그리고 주택연금에 대한 이해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연금으로 우리나라의 3층 연금제도에서 1층에 위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금보험은 보통 세제비적격연금으로도 불리는데, 세제적격연금인 연금저축과 달리 세액공제는 되지 않는다. 대신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어 노후

대비용 절세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이 노후자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은퇴자들에게 유용한 노후소득 마련 수단이다. 이들 연금에 대한 이해력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공적연금 등 기타' 부문의 연금이해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44.5점이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부문보다는 평균 점수가 낮지만, IRP 부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응답자 1,000명 중 50점을 받은 이들이 219명으로 가장 많았다. 60점 이상의 고득점 비중은 29.5%, 40점 미만의 저득점 비중은 30.2% 였다.

<도표 III-9> 공적연금 등 기타 부문 점수 분포 (%)



둘째, 연령별로는 50대, 가입상품별로는 두 종류 이상의 사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들의 이해력 점수가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의 이해력 점수는 48.6점으로 40대(42.9점) 및 30대(42.3점) 보다 높았다. 이는 연금 수령시기에 가까운 50대가 각종 연금제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두 종류 이상의 사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점수(47.0점)가 미가입자(42.4점)나 한가지 연금만 가입한 사람들(43.0점) 보다 높았다.

셋째, 연금 수령에 관한 문항의 정답률이 특히 저조했다. 공적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여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같이 보험료 납입에 관련된 질문의 정답률은

74.0%, 61.2%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물가상승에 따른 공적연금 지급액 조정, 노령연금 및 주택연금 지급액 과세 등 연금 수령과 관련된 문항의 정답률은 20.2~41.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도표 III-10> 공적연금 등 기타 부문 문항별 정답률

이해도	구분	질문	정답률
상	공적연금	공적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74.0%
상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율	61.2%
중	국민연금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51.7%
중	연금보험	변액연금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46.7%
중	기초연금	기초연금 지급 조건	42.9%
중	연금보험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구분	42.8%
중	국민연금	노령연금 과세 여부	41.0%
하	공적연금	공적연금의 물가상승에 따른 지급액 조정 특징	39.4%
하	주택연금	주택연금 가입 조건 중 부부 연령	25.3%
하	주택연금	주택연금 수령액 과세 여부	20.2%

*이해도 상: 정답률 60% 이상, 중: 40~60%, 하: 40%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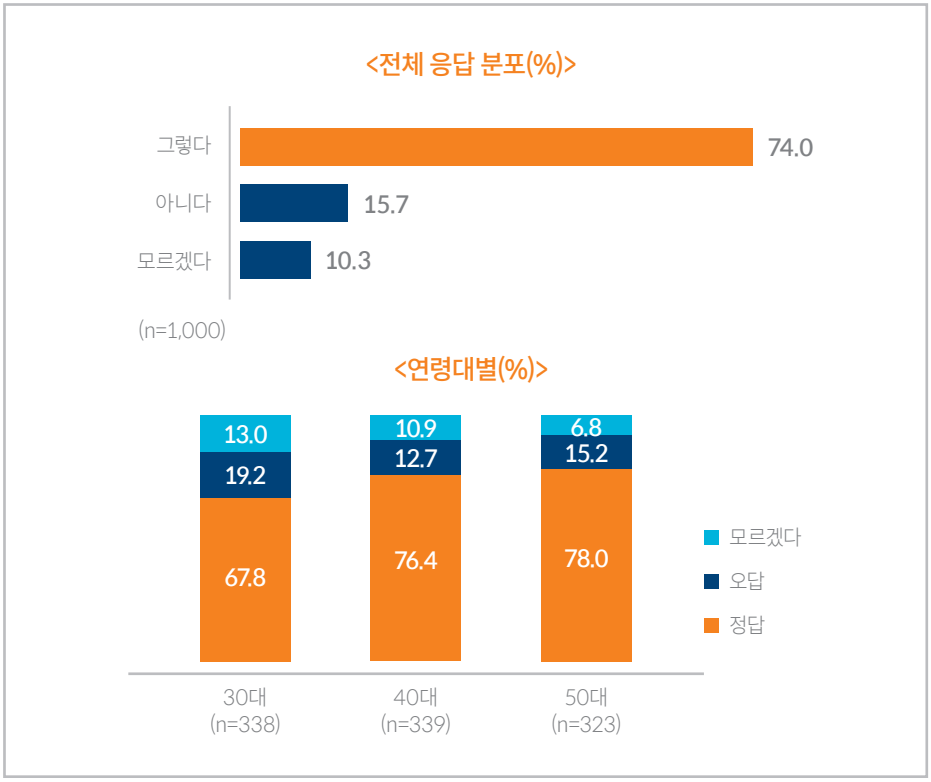
2) 문항별 분석

【공적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정답률 74.0%)】

<Q1> 현재 개인이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납입하는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정답: 1. 그렇다
해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에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응답자 4명 중 3명(74%)은 공적연금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반면 오답(15.7%)과 '모르겠다'(10.3%)는 응답은 적은 편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정답률(67.8%)보다 40~50대의 정답률(각각 76.4%, 78.0%)이 높은 편이었다.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율 (정답률 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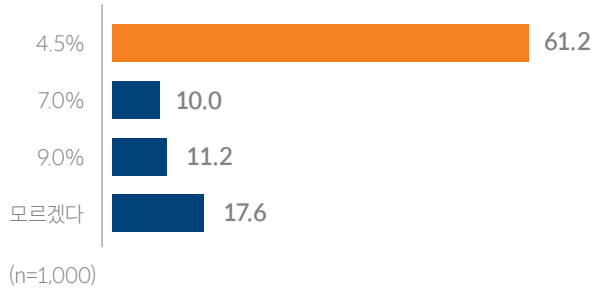
<Q2>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다음 중 근로자가 내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몇 % 라고 생각하십니까?

1. 4.5%
2. 7.0%
3. 9.0%
4.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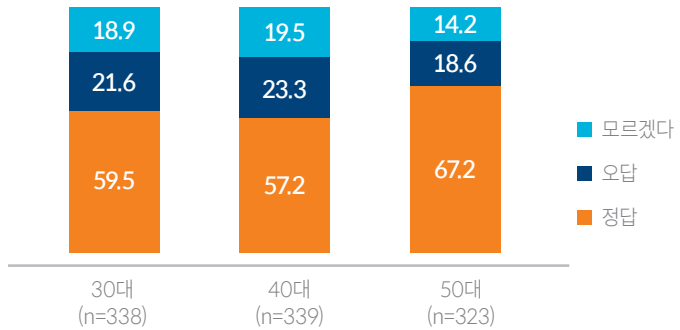
정답: 1. 4.5%

해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연금보험료율은 9%인데 사업장가입자(직장인)는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4.5%)씩 부담한다.

<전체 응답 분포(%)>



<연령대별(%)>



직장인 5명 중 3명(61.2%)은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4.5%)을 알고 있었다. '모르겠다'를 택한 비율은 17.6%, 오답률은 21.2%였다. 50대의 정답률(67.2%)이 3~40대(각각 59.5%, 57.2%)보다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정답률 차이는 크지 않았다. (남성 62.1%, 여성 60.3%)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정답률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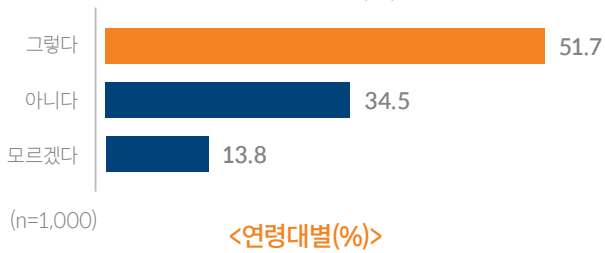
<Q3> 노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정답: 1.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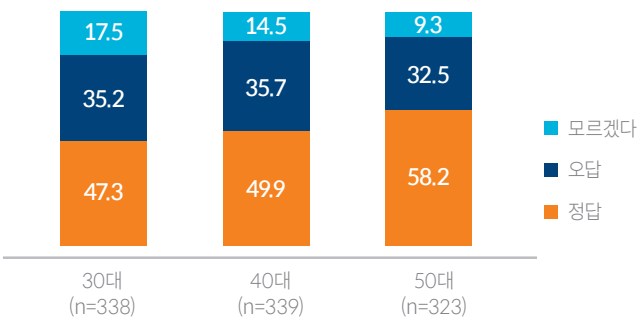
해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60세 이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있다. 이때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간은 연금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A값(2021년 월 253만9734원) 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전체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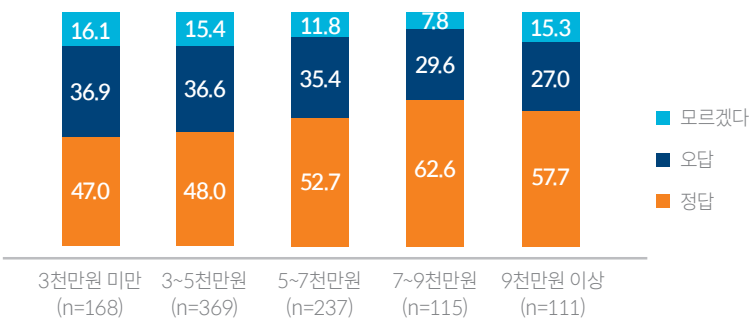


(n=1,000)

<연령대별(%)>



<연소득 구간별(%)>



응답자의 51.7%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반해 오답을 택한 사람은 34.5%,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8% 였다. 연금수령이 임박한 50대의 정답률(58.2%)이 30대(47.3%) 및 40대(49.9%) 보다 높았다.

본 문항에서는 대체로 연소득이 높을수록 정답률이 높았다. 특히 연소득이 7~9천만원 사이인 고소득 직장인의 정답률(62.6%)이 가장 높았다. 현재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퇴직 후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변액연금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정답률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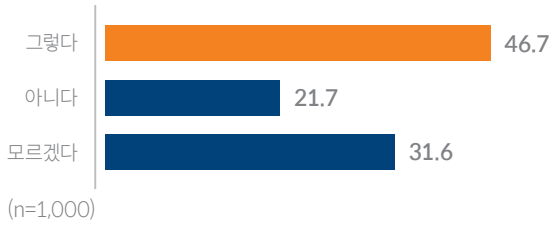
<Q4> 변액연금보험은 일정기간 계약을 유지하면 연금을 받을 때 수익이 비과세된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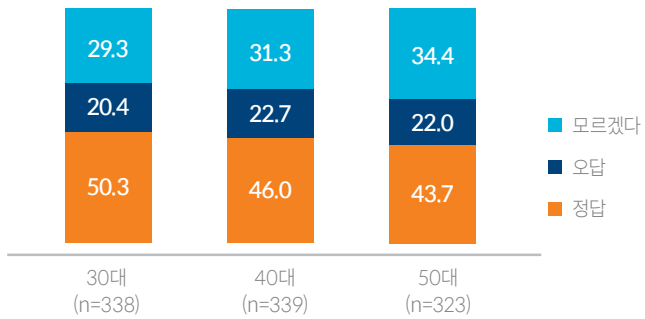
정답: 1.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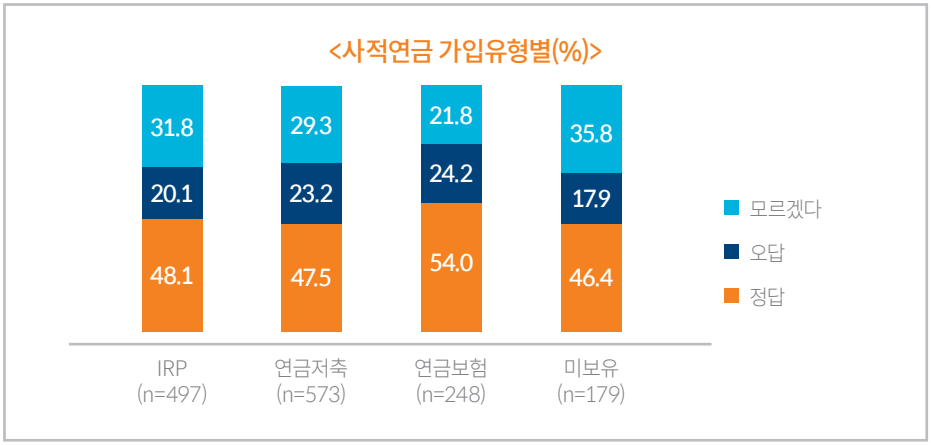
해설: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에 관한 세제 적용을 받는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응답 분포(%)>



<연령대별(%)>





변액연금보험을 일정기간 유지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응답자 중 46.7%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답을 선택한 비율(21.7%) 보다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31.6%)이 높았다. 변액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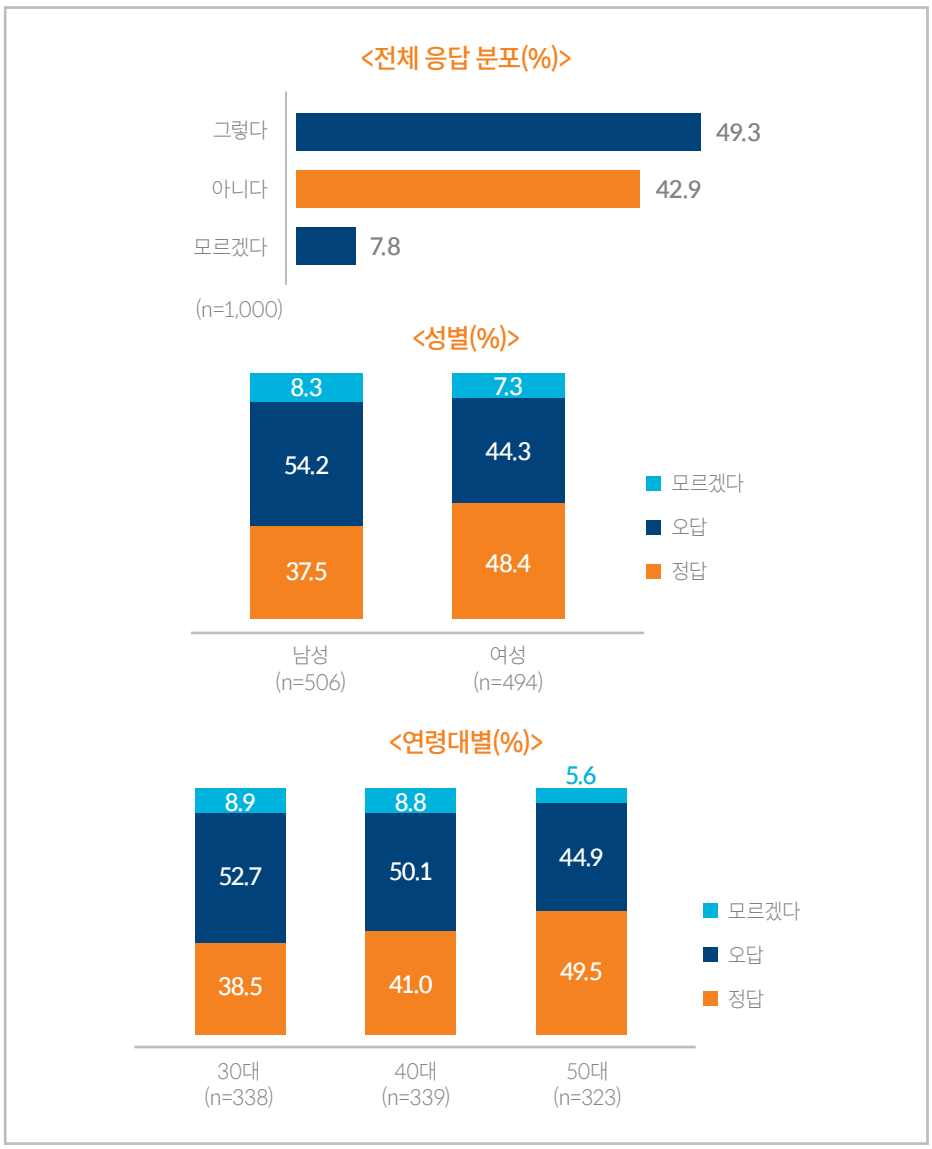
한편 연령대가 낮을수록 변액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30대의 정답률은 50.3%로 40대(46.0%)와 50대(43.7%)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다. 공적연금 등 기타 부문에서 대부분 50대의 정답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 문항은 예외인 것이 특이한 점이다. 사적연금의 가입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연금보험 가입자의 정답률(54.0%)이 다른 이들에 비해 높았다. 자신들이 선택한 상품인 만큼, 세제 특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지급 조건 (정답률 42.9%)】

<Q5>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전원에게 지급된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정답: 2. 아니다
해설: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연금이 지급되지만,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직장인 중 기초연금이 고령자 전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비율은 42.9%였다. 고령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비율(49.3%)이 정답률보다 높았다.

집단별 정답률을 비교해 보면 남성(37.5%)보다 여성(48.4%)의 정답률이 11%포인트 가량 높았다. 다른 문항에서는 대체로 남성의 정답률이 높거나 성별 정답률 차이가 크지 않은데, 이 문항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별로 비교해 봤을 때는 다른 문항에서와 유사하게 3~40대보다 50대의 정답률(49.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구분 (정답률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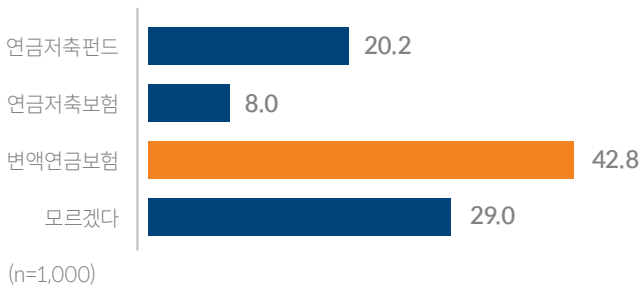
<Q6> 다음 중 납입시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연금상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연금저축펀드
2. 연금저축보험
3. 변액연금보험
4.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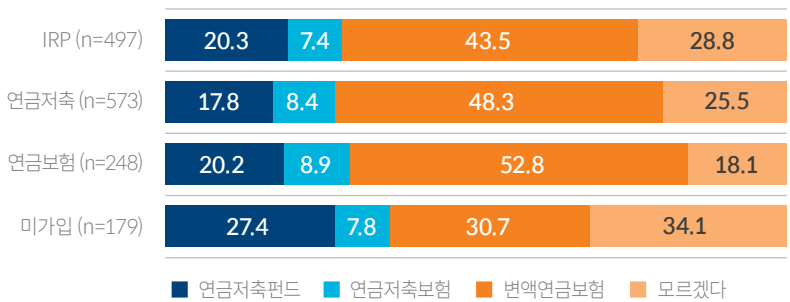
정답: 3. 변액연금보험

해설: 개인연금은 납입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 '연금저축'과 납입시 세제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가 있고, 연금보험에는 변액연금보험과 일반연금보험(금리형)이 있다.

<전체 응답 분포(%)>



<사적연금 가입유형별(%)>



응답자의 42.8%는 납입시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상품을 구분하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9.0%, 연금저축 납입액이 세액 공제되지 않는다고 잘못 아는 경우는 28.2%의 비중을 차지했다. 사적연금 가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IRP나 연금저축 가입자의 정답률(각각 43.5%, 48.3%)에 비해

연금보험 가입자의 정답률(52.8%)이 높은 편이었다. 연금보험 가입자 248명 중 81%가 변액연금보험 가입자였는데, 이들의 정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노령연금 과세 여부 (정답률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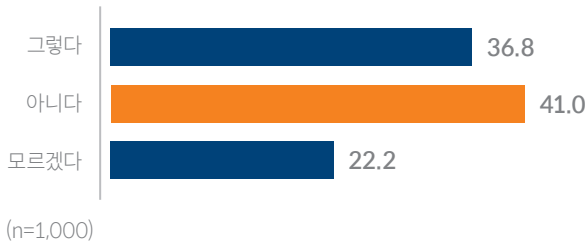
<Q7> 국가가 국민연금 운영과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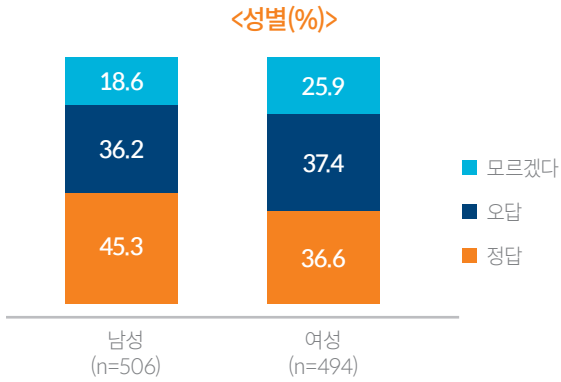
정답: 2. 아니다

해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없던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1월부터 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되면서 2002년 이후 납부한 연금보험료 분의 연금수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전체 응답 분포(%)>



<성별(%)>



직장인 5명 중 2명(41.0%) 정도가 노령연금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노령연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는 36.8% 였다. 오답률

이 정답률 못지 않게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노령연금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은 편으로 보인다. 집단별로 보면 여성(36.6%)보다는 남성(45.3%)의 정답률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공적연금의 물가상승에 따른 지급액 조정 특징 (정답률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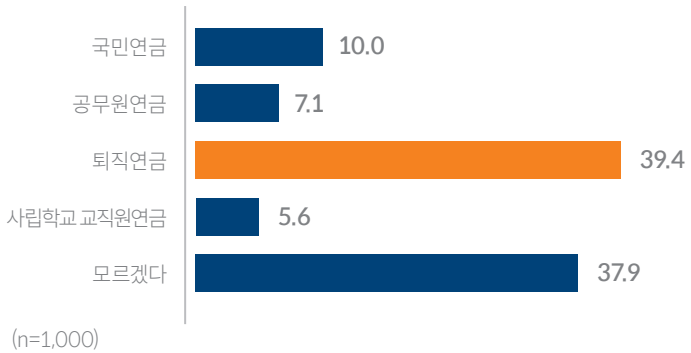
<Q8> 다음 중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되는 연금이 아닌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국민연금
2. 공무원연금
3. 퇴직연금
4.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5.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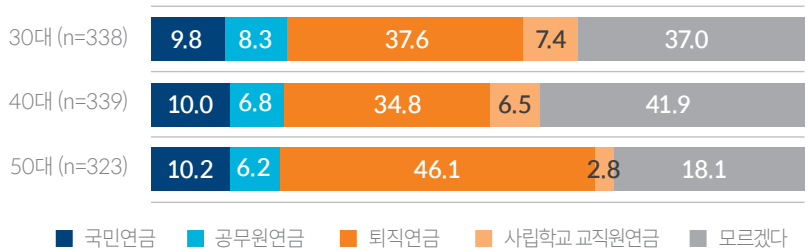
정답: 3. 퇴직연금

해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국가가 종신 지급을 보장하며 매년 물가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퇴직연금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이 변동되지 않는다.

<전체 응답 분포(%)>



<연령대별(%)>



수명연장으로 인해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공적연금의 연금액이 물가에 따라 조정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응답자들이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연금과 그렇지 않은 연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에 연동되지 않는 연금으로 공적연금 중 하나를 선택(22.7%)하거나 '모르겠다'(37.9%)고 응답한 비율이 60.6%에 달해, 정답을 맞힌 비율(39.4%)보다 상당히 높았다. 5명 중 3명은 공적연금의 연금액이 물가에 따라 매년 조정 지급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여러 연금 중 공적연금과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37.6%) 및 40대(34.8%)보다 50대(46.1%)의 정답률이 비교적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정답률(41.5%)이 여성(37.2%) 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중 부부 연령 (정답률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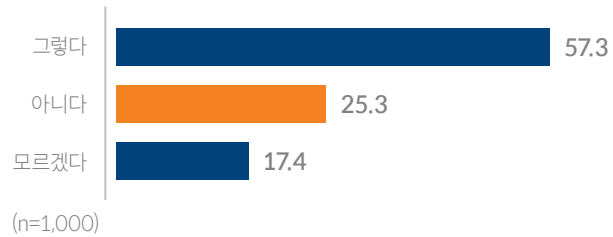
<Q9>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제도를 통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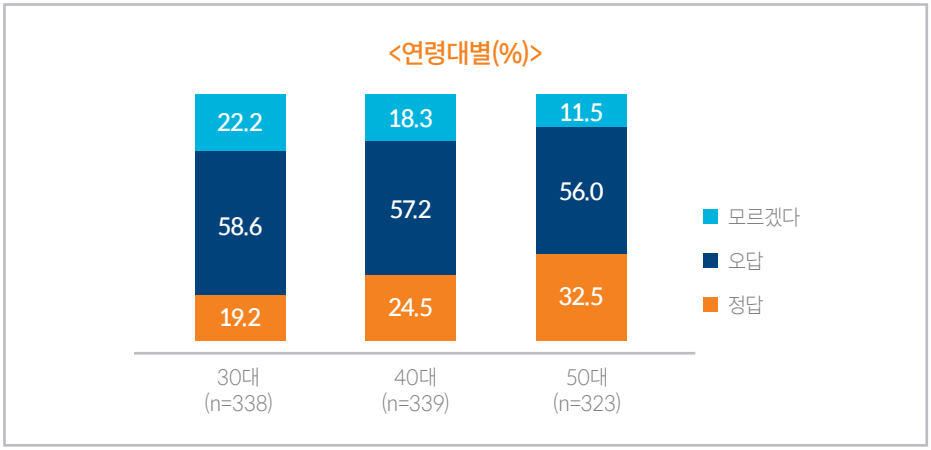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정답: 2. 아니다

해설: 주택연금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부부합산 9억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전체 응답 분포(%)>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응답자의 74.7%는 이 같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오답률(57.3%)이 정답률(25.3%)의 2배 이상이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오답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추측된다.

집단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답률이 높았다. 정답률은 30대 19.2% < 40대 24.5% < 50대 32.5% 순이었다. 30~40대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가능연령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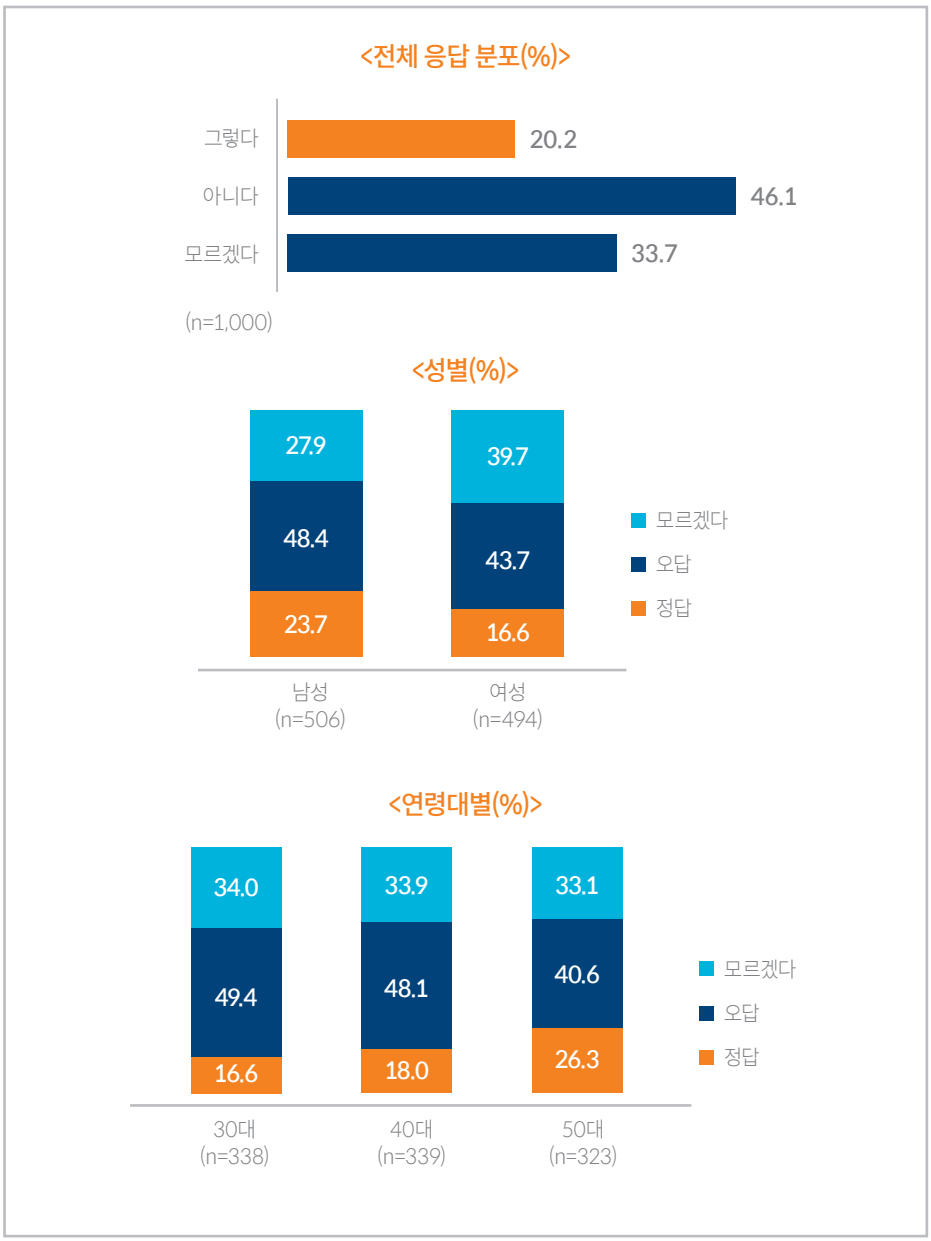
【주택연금 수령액 과세 여부 (정답률 20.2%)】

<Q10>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정답: 1. 그렇다

해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수령한 연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추후에 주택처분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비율은 20.2%로 적었다. 정답률보다 오답률(46.1%)이 2배 이상 높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33.7%에 달했다. 응답자 중 80%에 가까운 비중이 주택연금 수령액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23.7%)의 정답률이 여성(16.6%) 보다 높았으며, 여성 중 '모르겠다' (39.7%)고 답한 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적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16.6%), 40대(18.0%) 보다는 50대의 정답률이 26.3%로 높은 편이었다.

04 결론 및 시사점

'2021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조사' 결과, 3050 직장인들은 다양한 공·사적 연금에 가입해 적지 않은 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연금에 대한 이해력은 전반적으로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조사 결과에서 파악된 주요 특징 10가지를 추려, 우리나라 직장인의 연금이해력에 대해 정리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효과적인 연금 자산 운용을 위한 연금이해력 증진 방안을 제언하였다.

직장인 연금이해력의 10가지 특징

[연금이해력 총점]

① 3050직장인 연금이해력 점수는 400점 만점에 190.5점(100점 만점 환산시 47.6점)이다. 부문별로는 IRP 이해력 점수가 가장 낮았다.

4개 부문의 연금이해력 점수를 합산한 총점은 평균 190.5점이며, 부문별 평균 점수(각 100점 만점)는 연금저축 55.1점 〉 퇴직연금 51.7점 〉 공적연금 등 기타 44.5점 〉 IRP 39.2점 순이다.

② 연금이해력은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높았으며,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0대(187.8점)와 40대(185.9점)의 이해력 점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50대(198.1점)의 연금이해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퇴직연금을 제외한 연금저축, IRP, 공적연금 등 기타 부문에서 모두 50대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성(192점)과 여성(189점)의 점수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퇴직연금]

③ 퇴직연금 이해력 점수는 평균 51.7점이며, DC형 가입자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DC형 가입자(57.4점)의 이해력 점수가 DB형 가입자(56.3점) 및 퇴직연금 미가입자(46.7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DC형가입자들은 주요 문항 전반에서 기존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직장인들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④ 퇴직연금 제도 관련 지식은 양호하지만, 운용 관련 지식은 취약했다.

퇴직급여액 산출기준 관련 문항에 대해서는 77.2~78.6%의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 운용 규정(위험자산 투자한도), 투자가능 상품 관련 문항에 대한 정답률(각각 17.3%, 28.1%)은 매우 저조해, 이 부분의 지식이 취약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연금저축]

⑤ 연금저축 이해력 점수는 55.1점이며, 펀드에만 가입한 사람들의 이해도가 다른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보다 높았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의 점수는 63.0점이었는데, 이는 다른 상품을 위주로 가입한 사람들(펀드, 보험, 신탁 중 복수상품 가입 56.3점〉 신탁55.0점 〉보험 54.4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다. 펀드가입자들은 연금자산을 직접 운용하면서 연금관련 투자 정보와 지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습득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⑥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과세이연이나 운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을 묻는 문항은 81.4%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연금저축 운용수익 과세이연에 대한 문항이나 연금저축상품 운용특징에 관한 문항의 정답률은 각각 49.1%, 37.2%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IRP]

⑦ IRP 이해력 점수는 4가지 연금 부문 중 가장 낮아 평균 39.2점을 기록했다.

IRP부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41.6%가 10문제 중 4문제 미만을 맞혔으며, 60점 이상 고득점자는 24.9%였다. IRP는 제도적으로 정착된 기간이 짧고, 저변이 넓지 않아 아직은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⑧ IRP 계좌 내 상품 운용 및 연금저축과 함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IRP '운용' 단계에서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을 고르는 문항과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묻는 문항의 정답률은 각각 16.5%, 22.3%로 매우 낮았다. 이와 더불어 연금저축 연계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를 묻는 문항의 정답률(각각 16.8%, 31.6%)도 낮은 편이었다.

[공적연금 등 기타]

⑨ 공적연금 등 기타 부문 연금이해력 평균 점수는 44.5점이며, 특히 50대의 이해도가 높았다.

동 부문에서는 50대의 이해력 점수(48.6점)가 3~40대(각각 42.3점, 42.9점)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연금 수령 연령에 가까운 50대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전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⑩ 공적연금 납입단계 문항의 정답률은 높았지만, 지급액, 과세여부 등 인출단계 문항의 정답률은 낮았다.

연금납입 단계와 관련된 '공적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국민연금 보험료율' 문항의 정답률은 74.0%, 61.2%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반면, 물가상승을 반영한 연금지급액 조정, 노령연금 및 주택연금 지급액의 과세 등 인출 단계에 관한 문항에

서는 정답률이 20.2~41.0%로 저조한 수준이다.

효과적인 연금자산 운용을 위한 연금이해력 증진 방안

1) '세제혜택'이라는 좁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노후자산관리' 프레임으로 연금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이 강조되다 보니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단순히 퇴직소득세 감면이나 세액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원래 사적연금은 여러 금융상품을 편입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계좌'로 설계되었지만, 세제혜택 '상품'이라는 프레임이 강해 운용 플랫폼으로써 기능이 저하되었다. 연금 운용전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도 그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세제혜택' 이라는 좁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노후자산관리' 프레임으로 연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후자산관리 프레임으로 연금을 바라볼 때라야 비로소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시작될 수 있다.

2) 연금 '운용'에 관련된 지식을 대폭 향상해야 한다.

저금리 추세 속에 연금의 실질가치 보존과 장수위험 대응을 위한 연금자산운용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연금이해력 조사 결과, 정작 연금 '운용' 에 관련된 이해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계좌 운용 규정(DC, IRP 계좌 위험자산 투자한도)이나 투자 가능 상품을 묻는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낮았다.

연금 '운용' 에 관련된 지식을 대폭 향상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연금 상품에 대한 이해를 넓혀 효과적으로 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투자 자산인 연금의 특성을 감안한 운용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적립식 투자의 효과, 장기 분산투자의 리스크 감소 효과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다양한 연금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노후 자산운용은 금리변동, 물가상승, 장수위험과 같은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어느 한가지 연금만으로는 모든 위험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연금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종신연금을 수령해 장수위험에 대응할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 및 IRP에서는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물가상승에 대처할 수 있다.

연금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각 연금 부문별 이해도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IRP를 연금저축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묻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 다양한 연금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결합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등 연금 각각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각 연금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즉, 통합적 관점에서 연금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연금을 운용, 관리해야 한다.

4) 연금 인출단계 지식을 강화해야 한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연금 인출방법이나 인출 단계에서의 자산운용 등 인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연금이해력 조사 결과, 연금 인출 단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이같은 환경 변화와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면 IRP계좌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연령을 알고 있는 비율은 34.3%였고, 수령액에 물가상승이 반영되는 연금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도 39.4%로 낮았다.

다양한 연금 인출 방식의 특성 및 장단점을 이해하고, 연금 인출 시기와 기간, 방법 등을 조율하여 자신의 은퇴 계획에 맞는 효과적인 인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명연장으로 인해 은퇴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인출단계에서도 자산운용을 병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적립단계와 달리 인출단계에서는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더욱 중점을 둔 운용전략의 이해와 지식 강화가 필요하다.

5) 행동경제학적 요소를 가미한 제도적 넛지의 도입과 활용이 필요하다.

연금가입자의 연금이해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려면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금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한편, 연금이해

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연금자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적립,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보완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퇴직연금 자산축적을 돕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퇴직연금 자동가입을 기본설정으로 하고 탈퇴를 원할 경우 따로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을 도입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였다. 또한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배분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TDF(목표만기펀드)를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7]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연금가입자들도 손쉽게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우리나라도 연금자산운용 지식과 관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연금을 방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넛지[8]의 도입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특정 펀드 또는 투자일임 계약에 자동 투자되도록 설계된 제도

8 행동경제학자 리처트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이 쓴 책에서 유래한 말로,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부록> 연금이해력 조사문항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조사

< Part1. 퇴직연금 >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서술과 문제를 읽어보시고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시되,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경우에만 모르겠다고 답해주십시오.

퇴직급여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 이후 삶의 안정성을 위해 근로기간 동안 일정 액을 적립해주는 제도이며 기존의 법정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모두를 합하여 지칭하는 말입니다.

1) 법정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사내에 적립한 자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며,

2)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퇴직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회사 외부 금융 회사에 적립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 확정급여형(DB) 제도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퇴직금을 운용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 확정기여형(DC)제도는 각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 운용의 책임을 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음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각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전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만 '모르겠다'로 답해주십시오.

	O	X	모르겠다
1. 홍길동씨는 현재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퇴직연금 미도입) 만약 이 회사가 갑자기 도산, 폐업하게 되면 홍길동 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 퇴직금을 운용하여 임금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확정급여형(DB)제도보다 확정기여형(DC) 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3.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4. 근로자는 원하면 언제든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중간정산(중도인출)할 수 있다			

5.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6.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IRP계좌에서 연금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7. 다음 중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 계좌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퇴직금제도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3.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4. 모르겠다

8.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 자금을 위험자산(원리금 비보장)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50%
2. 70%
3. 최대 한도 제한이 없다
4. 모르겠다

9. 다음의 금융상품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상장주식
2. 사모펀드
3. 후순위채권
4. 상장지수펀드(ETF)
5. 모르겠다

10. 다음의 금융상품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퇴직급여 = 퇴직 전 [ ]개월 평균임금의 30일치 X 근속 연수

1. 1개월
2. 3개월
3. 12개월
4. 모르겠다

< Part2. 연금저축 >

연금저축에 관한 서술과 문제를 읽어보시고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시되,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경우에만 모르겠다고 답해주십시오.

연금저축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노후대비 금융상품으로, 저축액 납입 시 세액공제를 해주고, 추후 연금형태로 인출 시 연금소득세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사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각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전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만 '모르겠다'로 답해주십시오.

	O	X	모르겠다
1. 자영업자도 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로 옮겨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할 수 있다.			
3.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원금과 그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4. 연금저축 적립액을 연금으로 인출하려면 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만 한다.			
5. 연금저축은 적립액을 인출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지, 연금으로 받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낸다.			

6. 한 해 동안 연금저축에 저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 400만원
2. 1800만원
3. 제한이 없다
4. 모르겠다

7. 다음 중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펀드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날 수 있다.
2.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적립금을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종신형연금은 연금개시 후 사망시까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연금지급 형태를 의미합니다.)
4. 모르겠다

8. 다음 중 실적배당형 연금저축상품이 아닌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적배당형이란 자금 운용성과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지는 운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1. 연금저축신탁
2. 연금저축펀드
3. 연금저축보험
4. 모르겠다

9. 총급여가 6천만원인 40세 직장인 홍길동씨는 올해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이 중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 300만원
2. 400만원
3. 700만원
4. 모르겠다

10. 다음 중 연금저축 운용 중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년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2. 운용 중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인출 시점에 부과된다.
3. 가입자가 세금 부과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4. 모르겠다

< Part3. IRP(개인형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에 관한 서술과 문제를 읽어보시고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시되,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경우에만 모르겠다고 답해주십시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계좌입니다. 그러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이체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IRP에 별도로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성격이 유사하여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각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전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만 '모르겠다'로 답해주십시오.

	O	X	모르겠다
1. IRP계좌 적립금은 전액을 주식형 펀드로 운용할 수 있다.			
2. IRP계좌 적립금은 세제 상 불이익없이 자유롭게 중도인출 할 수 있다.			
3. 금융회사 별로 IRP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예금, 펀드, ETF, 보험 등) 이 다르다.			
4. IRP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수익은 계좌 밖으로 인출하지 않는 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 65세인 김철수씨는 지난해 IRP에서 총 150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김철수씨가 수령한 1500만원의 연금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IRP자금은 김철수씨가 개인적으로 납입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그 수익금이며, 연금수령액은 연금수령한도 이내이다.)			

6. 다음 중 IRP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 소득이 없는 대학생
2. 공기업 근로자 또는 공무원
3. 자영업자
4. 모르겠다

7. 홍길동씨가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IRP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 300만원
2. 1400만원
3. 1800만원
4. 제한 없다
5. 모르겠다

8. IRP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자금을 인출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1. 50세
2. 55세
3. 60세
4. 모르겠다

9. 다음 중 IRP계좌에 편입할 수 없는 금융상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예금
2. 원리금보장형 보험
3. 주식 (직접투자)
4. 상장지수펀드(ETF)
5. 상장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6. 모르겠다

10. 총급여가 6천만원인 40세 직장인 홍길동씨는 올해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계획입니다. 홍길동씨가 IRP에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은 최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 300만원
2. 500만원
3. 700만원
4. 모르겠다

< Part4. 공적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 등 기타 연금 전반에 관한 서술과 문제를 읽어보시고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시되,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경우에만 모르겠다고 답해주십시오.

다음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각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전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만 '모르겠다'로 답해주십시오.

	O	X	모르겠다
1. 현재 개인이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납입하는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전원에게 지급된다.			
3. 변액연금보험은 일정기간 계약을 유지하면 연금을 받을 때 수익이 비과세된다.			
4. 국가가 국민연금 운영과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 노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다.			
6.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제도를 통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7.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8. 다음 중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되는 연금이 아닌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국민연금
2. 공무원연금
3. 퇴직연금
4.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5. 모르겠다

9. 다음 중 납입 시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연금상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연금저축펀드
2. 연금저축보험
3. 변액연금보험
4. 모르겠다

10.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다음 중 근로자가 내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몇 % 라고 생각하십니까?

1. 4.5%
2. 7.0%
3. 9.0%
4. 모르겠다

MIRAE ASSET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투자와연금TV
#구독 #좋아요 했더니
#연금관리법 #투자꿀팁
내 손안에 쏙!

꿀정보 시리즈 LINE UP

- 투자살롱
- 연금 TALK TALK
- 투자THE연금
- 우먼&머니톡
- 유튜브 세미나 and more!

"투자와연금TV" 구독은?

NAVER TV 검색 / YouTube 검색 에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로 검색하세요!

2021 미래에셋 연금서베이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측정 및 분석

MIRAE ASSET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